



Contents

- I . 환경분석
- II . 중점분석
- III . 목표모델 수립
- IV . 이행계획 수립

Table of Contents

I . 환경분석

- 1. 개요
 - 2. 외부환경 분석
 - 3. 내부환경 분석
 - 4. 정보기술동향 분석
 - 5. 정보화 방향성 수립
-

1.1 환경분석 Framework

1.2 환경분석 접근절차

II . 중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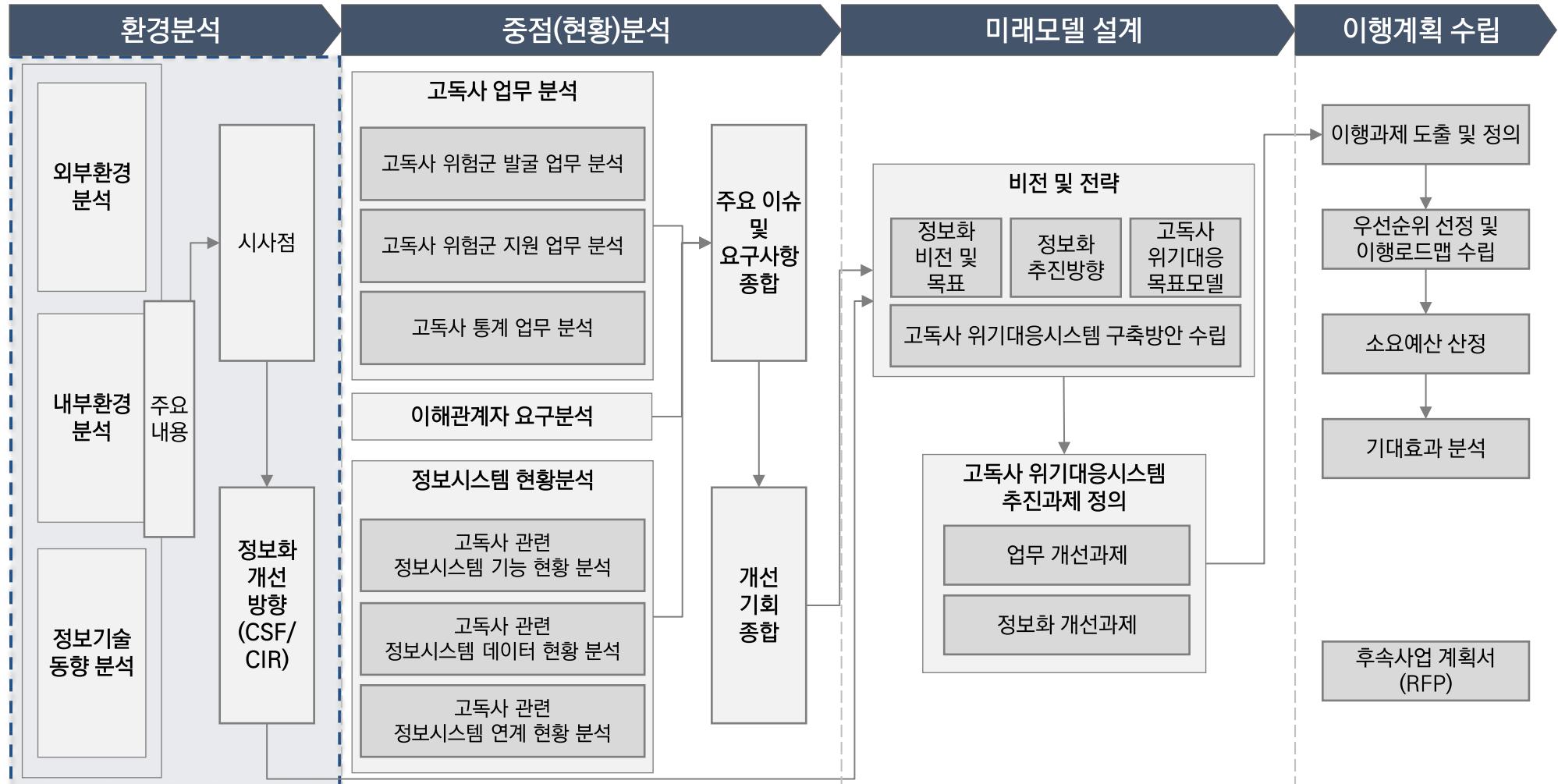
III . 목표모델 수립

IV . 이행계획 수립

1.1 환경분석 Framework

환경분석 Framework

외부환경 분석에서 정책, 사회, 법제도 분석을, 내부환경분석에서는 고독사 관련 정책 진행 현황을 확인하고, 정보기술 동향 분석으로 국내외 최신정보기술과 주요 요소기술 변화를 파악하여 각 영역의 시사점을 종합하여 정보화 개선 방향을 수립함



1.2 환경분석 접근 절차

I. 환경분석

환경분석 접근 절차

고독사 이슈 관련 외부(사회, 정책, 경제적 환경) 및 내부, 정보기술동향 각각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고독사 위기대응 업무체계 및 정보화방향성 도출에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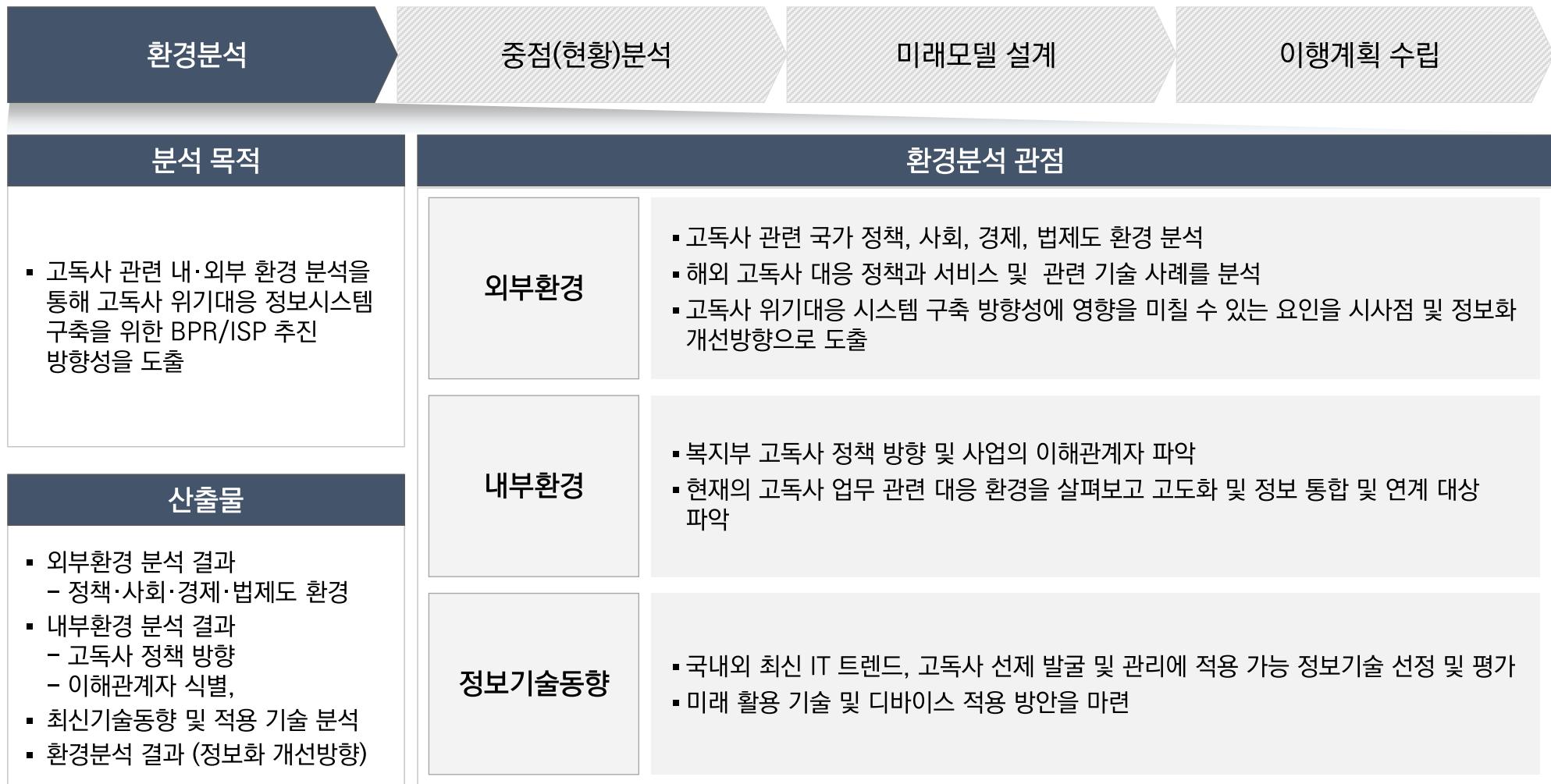


Table of Contents

I . 환경분석

- 1. 개요
 - 2. 외부환경 분석
 - 3. 내부환경 분석
 - 4. 정보기술동향 분석
 - 5. 정보화 방향성 수립
-

- 2.1 개요
- 2.2 사회환경 분석
- 2.3 정책환경 분석
- 2.4 법제도 분석
- 2.5 외부환경분석 종합

II . 중점분석

III . 목표모델 수립

IV . 이행계획 수립

2.1 외부환경 분석

2.1.1 개요

외부 환경 분석에서는 사회·경제환경, 정책환경, 정보화 환경 분석을 통해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 업무개선 및 정보화 방향성 설정에 반영함

수행 목적 및 범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사회·법제도 환경 분석 						
수행 범위	<table border="1"> <tr> <td>사회환경 분석</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구조 변화 현황 분석 사회적 관계망 변화 현황 분석 고독사 사망자 및 위험군 현황 </td></tr> <tr> <td>정책환경 분석</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고립, 고독사 중심의 국정과제 및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분석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관련 정책 분석 </td></tr> <tr> <td>법제도환경 분석</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급여 관련 법 구성 및 체계 분석 고독사 예방법 및 관련 법제도 분석 </td></tr> </table>	사회환경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구조 변화 현황 분석 사회적 관계망 변화 현황 분석 고독사 사망자 및 위험군 현황 	정책환경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고립, 고독사 중심의 국정과제 및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분석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관련 정책 분석 	법제도환경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급여 관련 법 구성 및 체계 분석 고독사 예방법 및 관련 법제도 분석
사회환경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구조 변화 현황 분석 사회적 관계망 변화 현황 분석 고독사 사망자 및 위험군 현황 						
정책환경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고립, 고독사 중심의 국정과제 및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분석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관련 정책 분석 						
법제도환경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급여 관련 법 구성 및 체계 분석 고독사 예방법 및 관련 법제도 분석 						

수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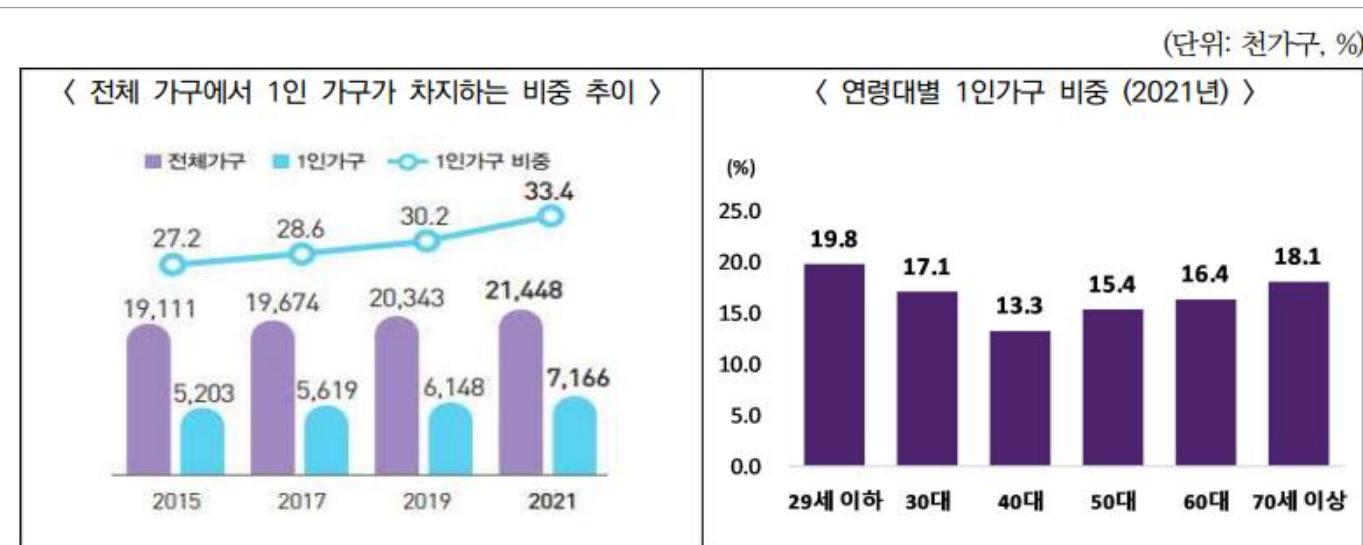
2.2 사회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2.1 사회·경제환경 분석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차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1인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됨

인구구조의 변화



주요내용

-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 : 15년 27.2% → 21년 33.4%로 지속적으로 증가
- 연령대별 1인가구 비중은 30대 이하가 19.8%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40대 이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1인가구 비중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사점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 : 15년 27.2% → 21년 33.4%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연령대별 1인가구 비중은 30대 이하가 19.8%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40대 이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1인가구 비중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차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1인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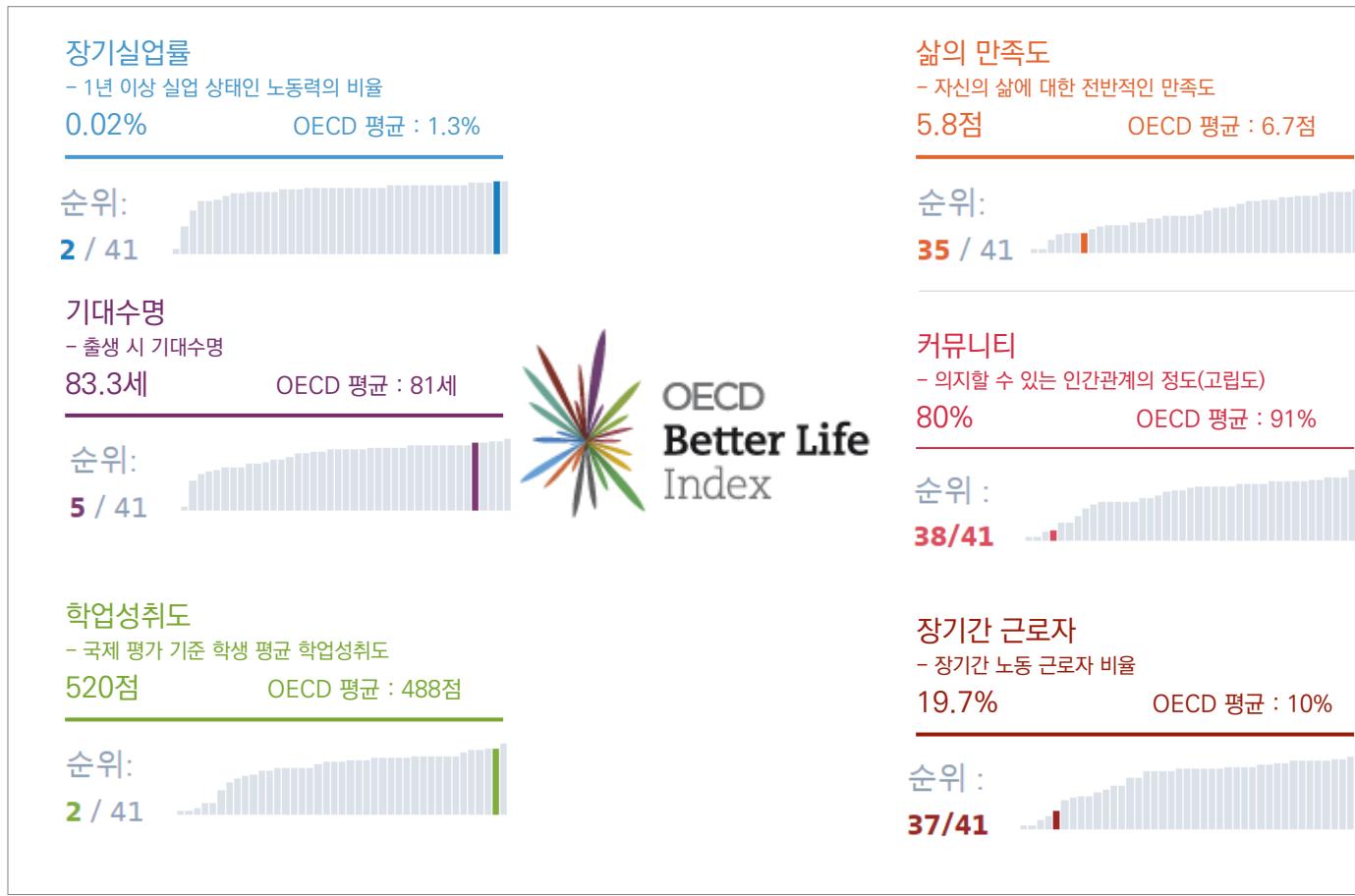
2.2 사회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2.1 사회·경제환경 분석

한국사회 분야별 삶의 질 분석 결과 학업성취도, 장기실업률, 기대수명 등의 지표는 긍정적이나 지역 커뮤니티 및 근로시간, 삶의 만족도 지표가 낮게 나오는 등 국민행복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한국사회 분야별 삶의 질



주요내용

- OECD 2022 삶의 질 지표 분석 결과 장기실업률, 기대수명, 교육역량 분야등의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삶의 만족도, 지원네트워크의 품질, 근로시간 과다등의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타남
- 삶의 만족도분야 지표는 5.8점으로 OECD 평균 6.7점보다 낮게 집계됐으며 41개국 중 35위를 기록
- 지역 커뮤니티 분야 지표는 80%로 OECD 평균 91%보다 낮게 집계됐으며 41개국 중 38위를 기록

2.2 사회환경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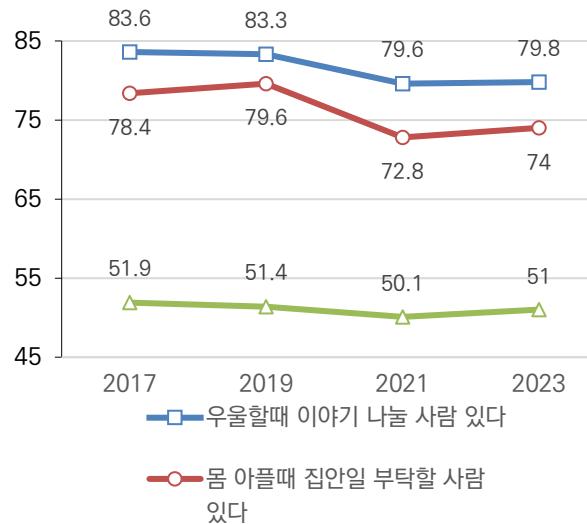
I. 환경분석

2.2.1 사회·경제환경 분석 > 2.2.1.1 사회환경 분석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사회적 관계망은 돌봄, 경제, 정서적 관계망 모든 지표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사회적 관계를 맺을 사람 인원 수도 줄어들고 있음

사회적 관계망 동향 – 전반

사회적 관계망 – 도움받을 사람 사회조사 통계



연도	사회적 관계망					
	우울할때 이야기 나눌 사람 있다	인원	몸 아플때 집안일	인원	갑자기 큰 돈	인원
2017	83.6	3.1	78.4	2.4	51.9	2.3
2019	83.3	2.9	79.6	2.3	51.4	2.2
2021	79.6	2.9	72.8	2.3	50.1	2.2
2023	79.8	2.9	74.0	2.3	51.0	2.2

정서적 관계망은 17년 83.6%에서 23년 79.8%, 나눌 인원 수는 3.1명에서 2.9명으로 감소
돌봄적 관계망은 17년 78.4%에서 23년 74.0%, 나눌 인원 수는 2.4명에서 2.3명으로 감소
경제적 관계망은 17년 51.9%에서 23년 51.0%, 나눌 인원 수는 2.3명에서 2.2명으로 감소

주요내용

- 정서적, 돌봄적, 경제적 관계망 세 지표 모두 2017년 대비 2023년 점차적으로 도움받을 사람의 비율 및 인원 수가 감소하는 추세

시사점

-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사회적 관계망은 돌봄, 경제, 정서적 관계망 모든 지표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사회적 관계를 맺을 사람 인원 수도 줄어들고 있음

출처 2023 사회조사(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문) 결과, 통계청

2.2 사회환경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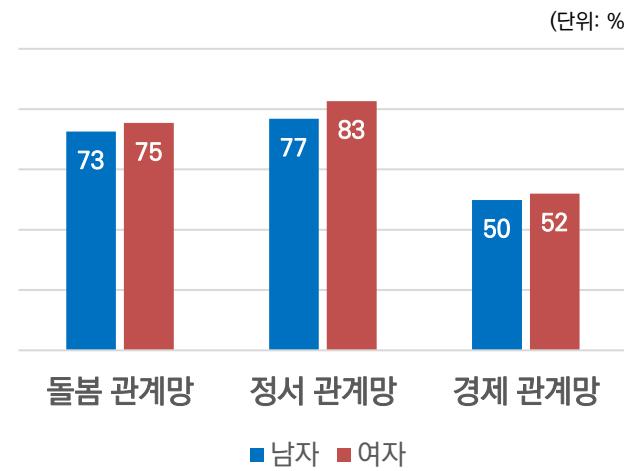
I. 환경분석

2.2.1 사회·경제환경 분석 > 2.2.1.1 사회환경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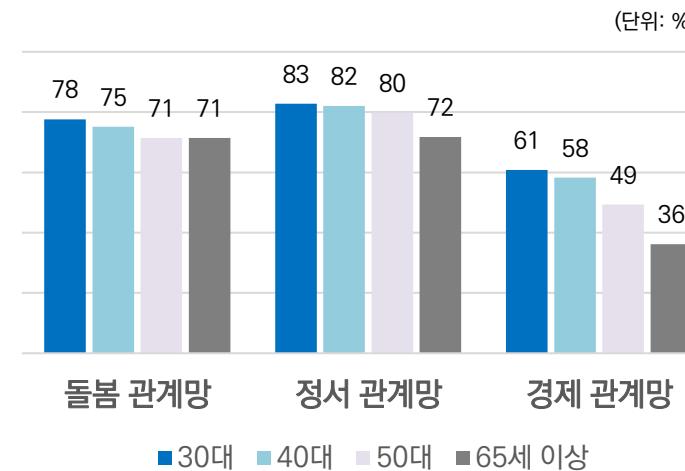
사회적 관계망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약화되는 경향을 보임

사회적 관계망 동향 – 인구 및 성별

성별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



인구구조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 조사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 지표에 대해 도움 받을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임

주요내용

- 사회적 관계망 조사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 지표에 대해 도움 받을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임

시사점

- 성별, 연령, 직업, 소득, 학력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 지표에 차이를 보임

2.2 사회환경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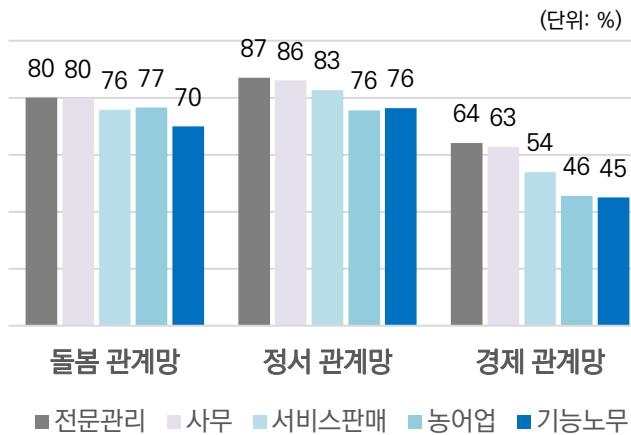
I. 환경분석

2.2.1 사회·경제환경 분석 > 2.2.1.1 사회환경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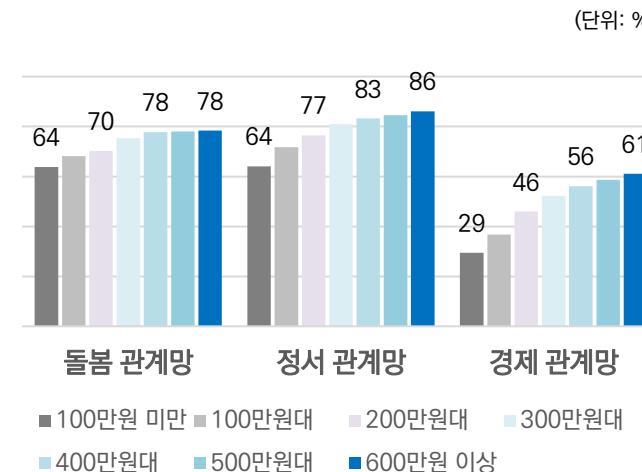
사회적 관계망은 농어업 및 기능노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다른 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비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주변에 도움 받을 사람이 적다고 조사됨

사회적 관계망 동향 – 직업 및 소득

종사 직업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



가구별 소득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 조사 결과 농어업 및 기능노무직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문관리, 사무직에 종사 인구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경향을 띠며,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임

주요내용

- 사회적 관계망 조사 결과 농어업 및 기능노무직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문관리, 사무직에 종사 인구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경향을 띠며,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임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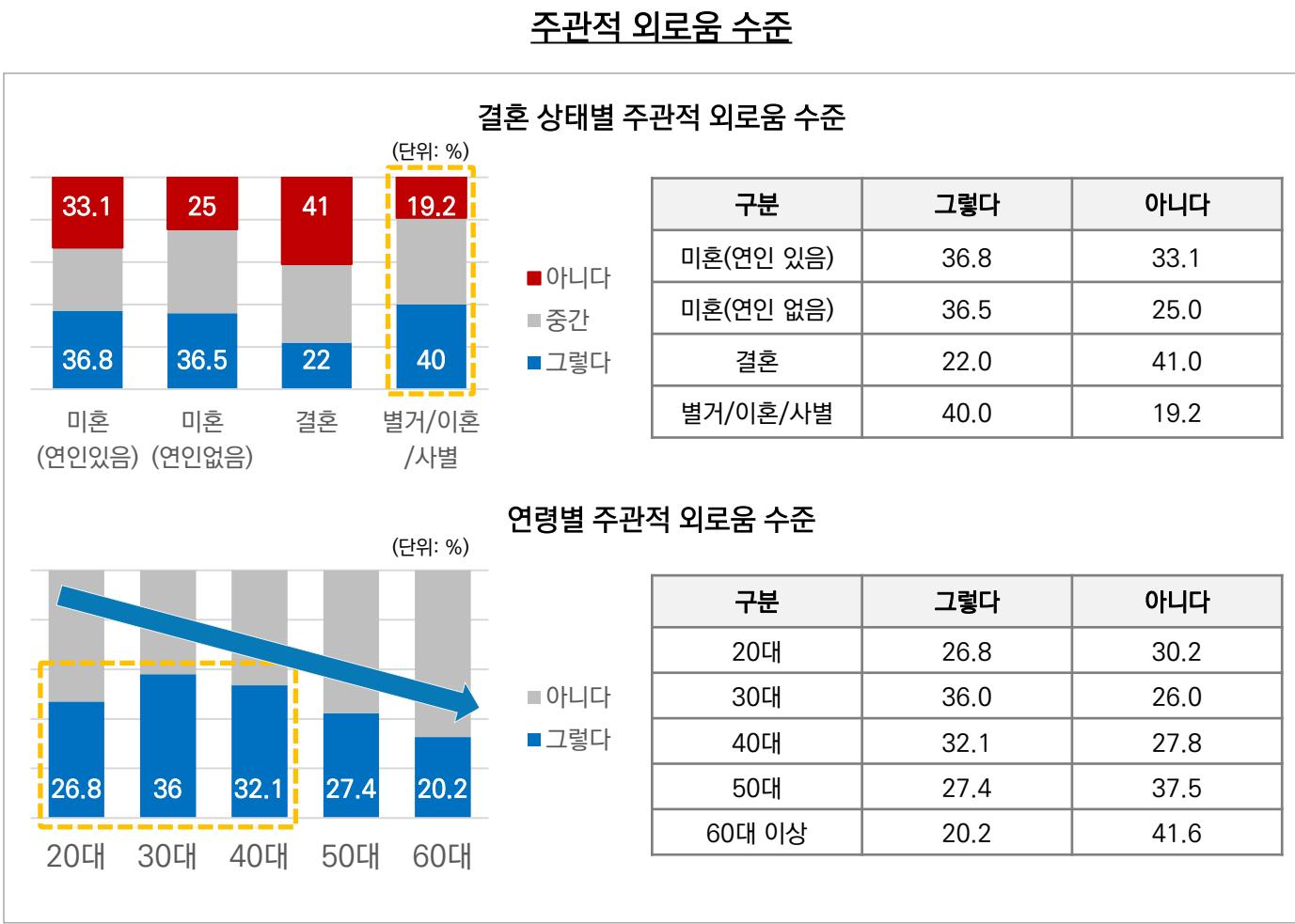
- 성별, 연령, 직업, 소득, 학력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 지표에 차이를 보임

2.2 사회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2.1 사회·경제환경 분석 > 2.2.1.1 사회환경 분석

주관적 외로움 수준 조사 결과 연령대가 낮은 집단에서 주관적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별거/이혼/사별 경험이 있을 경우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조사됨



주요내용

-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별거/이혼/사별 40.0%, 미혼(연인 있음) 36.8%, 미혼(연인 없음) 36.5%, 결혼 22.0%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함
- 연령이 높아질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추세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임

시사점

- 연령대가 낮은 집단에서 주관적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 별거/이혼/사별 경험이 있을 경우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출처 :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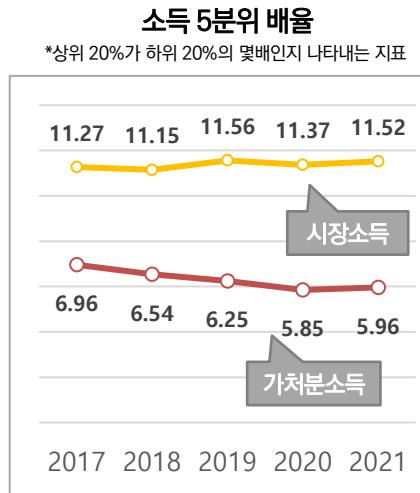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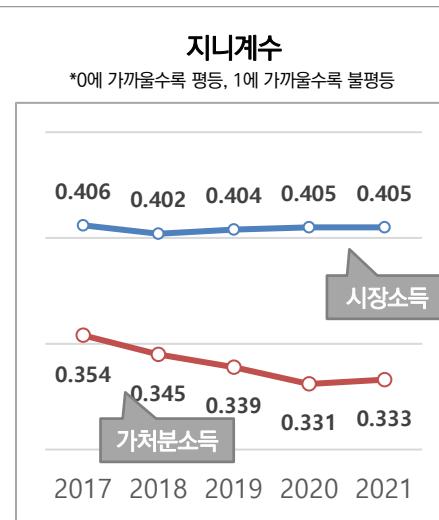
2.2 사회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2.1 사회·경제환경 분석 > 2.2.1.2 경제환경 분석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소득분배지표 추이 분석 결과 공공복지지원을 통해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분배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시장소득 기준 소득분배지표는 악화되고 있음

3대 소득분배지표 추이



지니계수 추이
0.406 (2017) → 0.405 (2021)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11.27 (2017) → 11.52 (2021)

상대적 빈곤율 추이
19.7 (2017) → 20.8 (2021)

-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추이가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소득 양극화 심화

주요내용

- 지니계수 추이는 17년 0.406에서 21년 0.405으로 비슷한 양상을 띤다.
- 상대적 빈곤율 추이는 17년 19.7%에서 21년 20.8%로 증가한다.
- 지니계수 추이,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상대적 빈곤율 추이 등 3대 소득분배지표 분석 결과 소득 양극화 심화

시사점

- 공공복지지원을 통해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분배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시장소득 기준 소득분배지표는 악화되고 있음을

2.2 사회환경 분석

I. 환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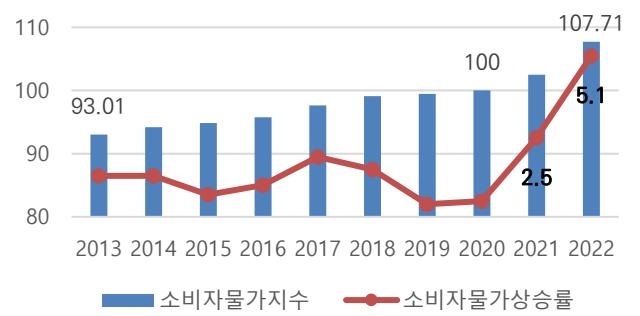
2.2.1 사회·경제환경 분석 > 2.2.1.2 경제환경 분석

경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및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장경제 안정을 위한 긴축재정의 영향으로 복지, 민생 안정정책의 축소가 예상됨

인플레이션과 가계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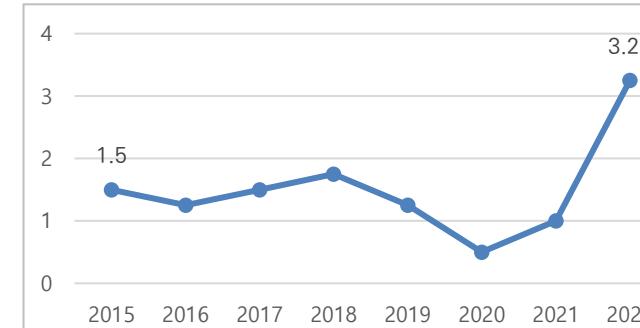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20년=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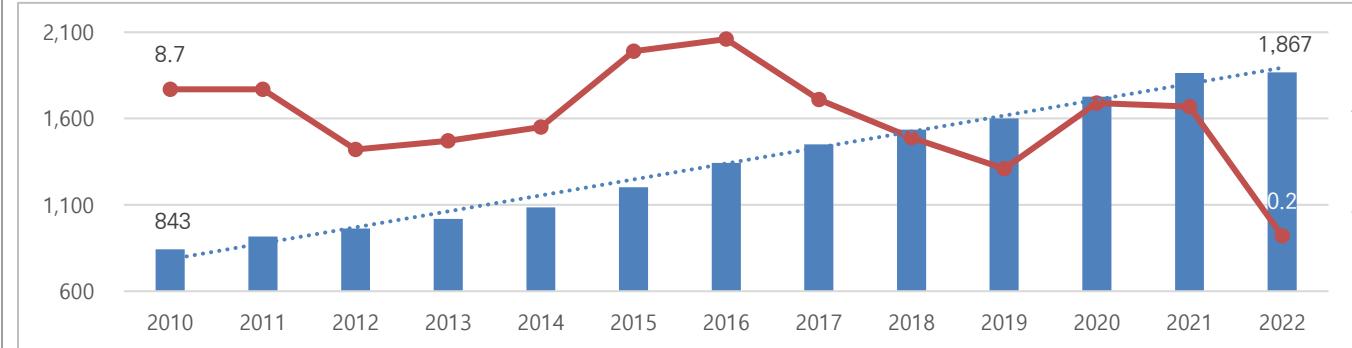
시장금리 추이

(단위: %)



가계신용 동향

(단위: 조원, %)



출처 : 소비자물가조사(통계청), 경제통계시스템(한국은행), 가계신용동향(한국은행)

주요내용

- 경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으로 인플레이션이 급증함
-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파고를 넘기 위하여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이어감

시사점

- 시장경제 안정을 위한 긴축재정 기조로 인하여 복지, 민생 안정정책의 축소가 예상됨

2.2 사회환경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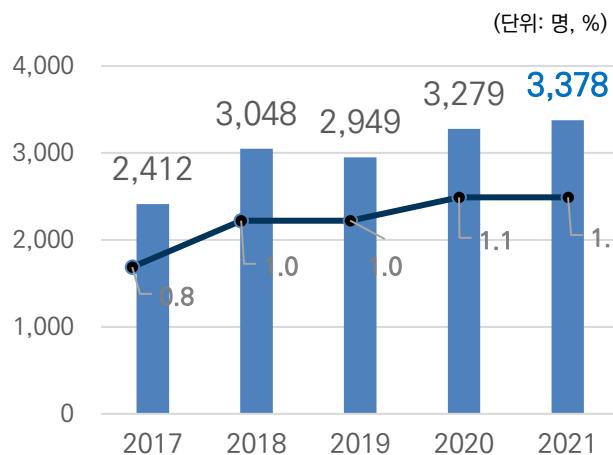
I. 환경분석

2.2.1 사회·경제환경 분석 > 2.2.1.3 고독사실태현황 분석

인구구조 및 사회적 관계망 약화에 따른 고독사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집계됨 (약 4배 가량)

고독사 실태 현황

최근 5년간 고독사 발생 추이



성별에 따른 고독사 발생 추이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증가 추세에 있음
전체 사망자 수에서 차지하는 고독사 비중은 매년 약 1% 내외 수준이며, 증가 추세
고독사 사망자 수는 매년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가량 많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10.0%, 여성이 5.6%로 차이를 보임

주요내용

-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증가 추세에 있음
- 고독사 사망자 수는 매년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가량 많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10.0%, 여성이 5.6%로 차이를 보임

시사점

- 인구구조 및 사회적 관계망 약화에 따른 고독사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고독사 사망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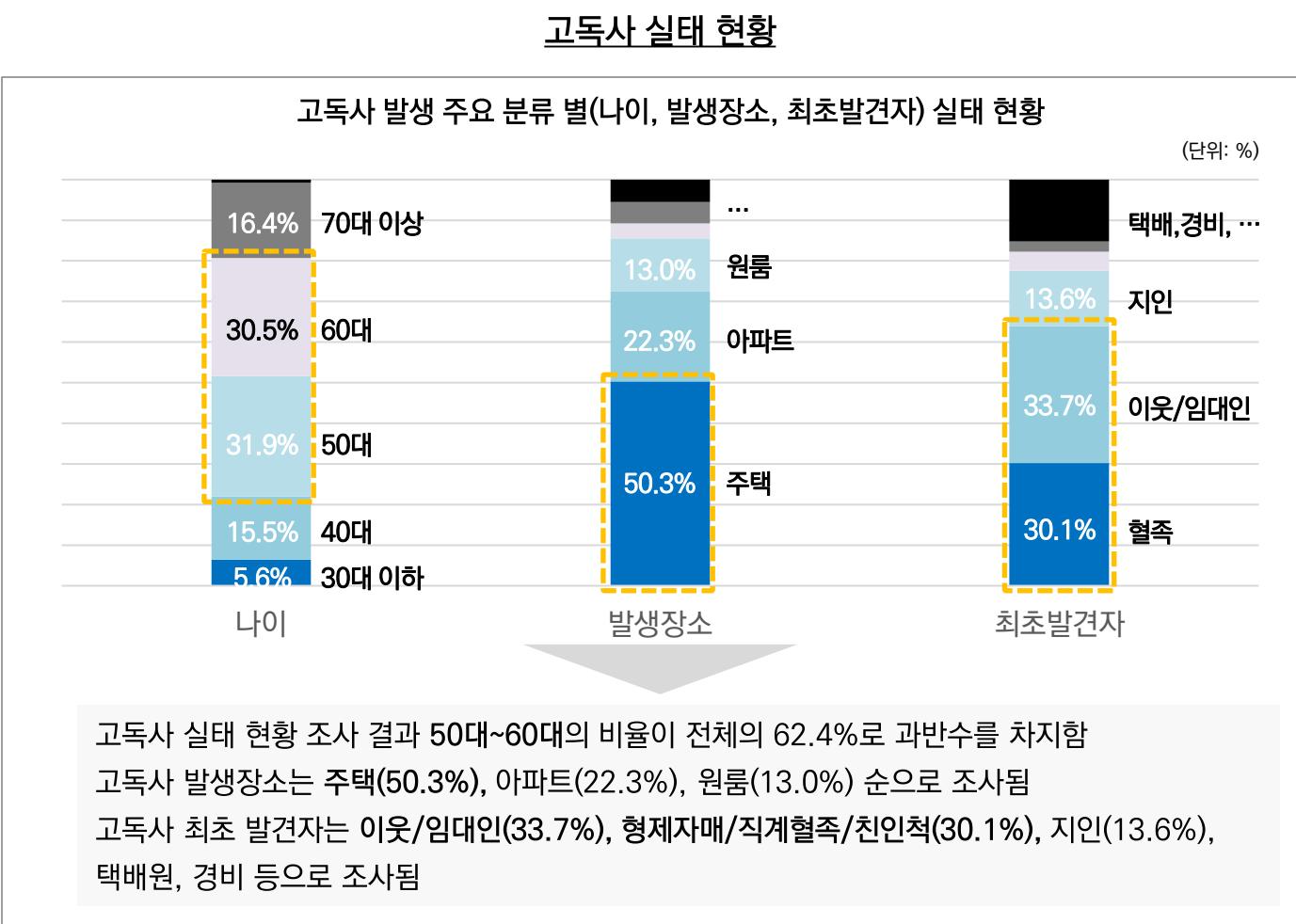
출처 :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2 사회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2.1 사회·경제환경 분석 > 2.2.1.3 고독사실태현황 분석

고독사는 노년층에 비해 50~60대인 중장년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동성이 낮은 주거형태(주택, 원룸 등)와 고독사 발생 현황 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내용

- 고독사 실태 현황 조사 결과 50대~60대의 비율이 전체의 62.4%로 과반수를 차지함
- 발생장소는 주택(50.3%), 아파트(22.3%), 원룸(13.0%) 순으로 조사됨
-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이웃 /임대인(33.7%), 형제 자매 /직계혈족/친인척(30.1%), 지인(13.6%), 등으로 조사됨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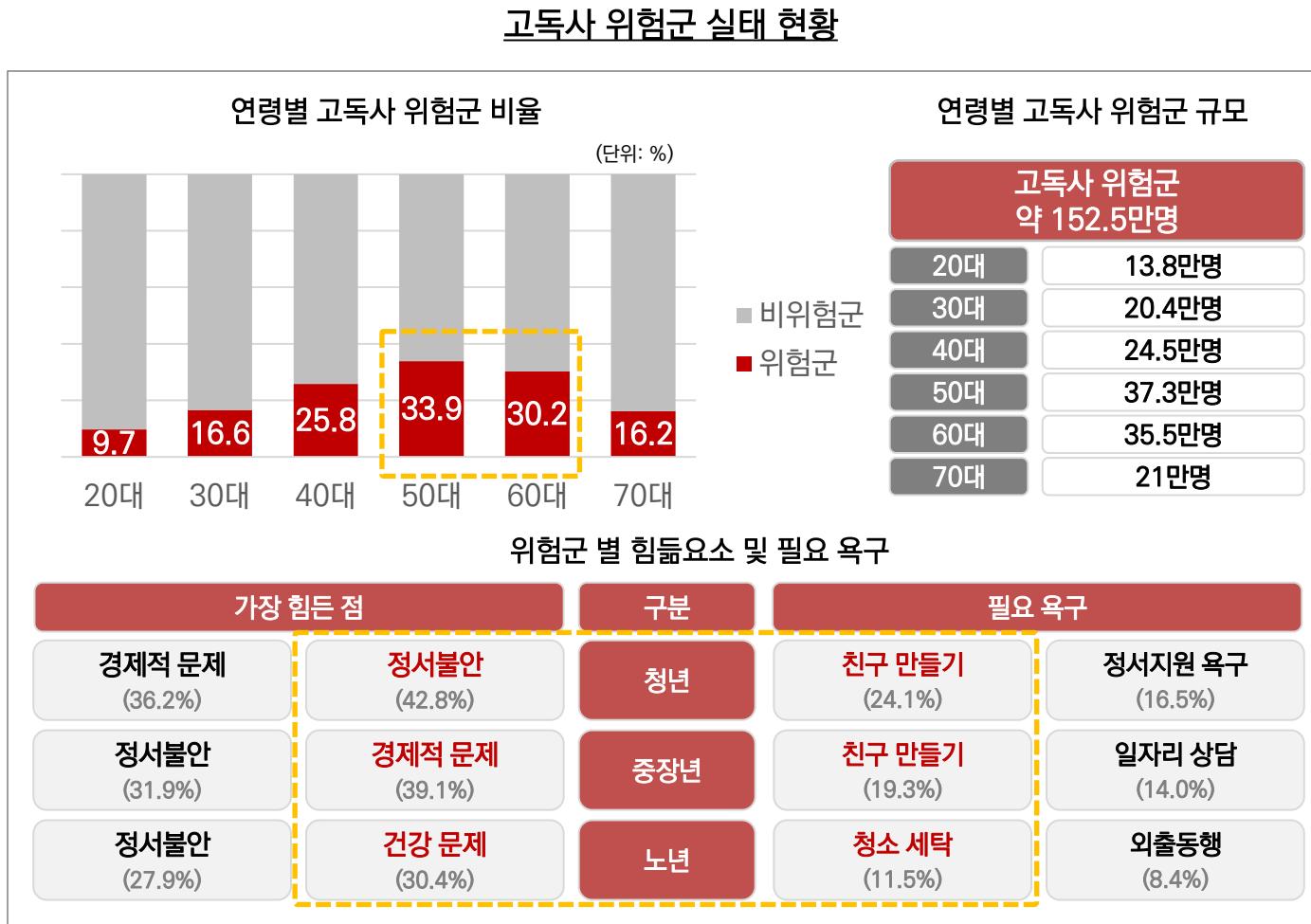
- 고독사는 노년층에 비해 50~60대인 중장년층에서 발생함
- 이동성이 낮은 주거형태와 고독사 발생 현황 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2.2 사회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2.1 사회·경제환경 분석 > 2.2.1.4 고독사 위험군 실태 현황 분석

고독사 위험군은 노년보다 40~60대 중장년층이 주요 위험군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에 따라 힘듦요소 및 필요 욕구는 차이를 보임



주요내용

- 고독사 위험군은 50대 33.9%, 60대 30.2%, 40대 25.8%로 주로 중장년층이 주요 위험군으로 조사됨
- 연령별 고독사 위험군 체감 힘듦 요소 및 필요 욕구는 차이를 보이며, 중장년의 경우 경제적 문제가 주요 힘듦 요소로 조사됨

시사점

- 고독사 위험군은 노년보다 40~60대 중장년층이 주요 위험군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에 따라 힘듦 요소 및 필요 욕구는 차이를 보임

출처 : 고독사 위험군 규모 및 특징, 보건복지부

2.2 사회환경 분석

I. 환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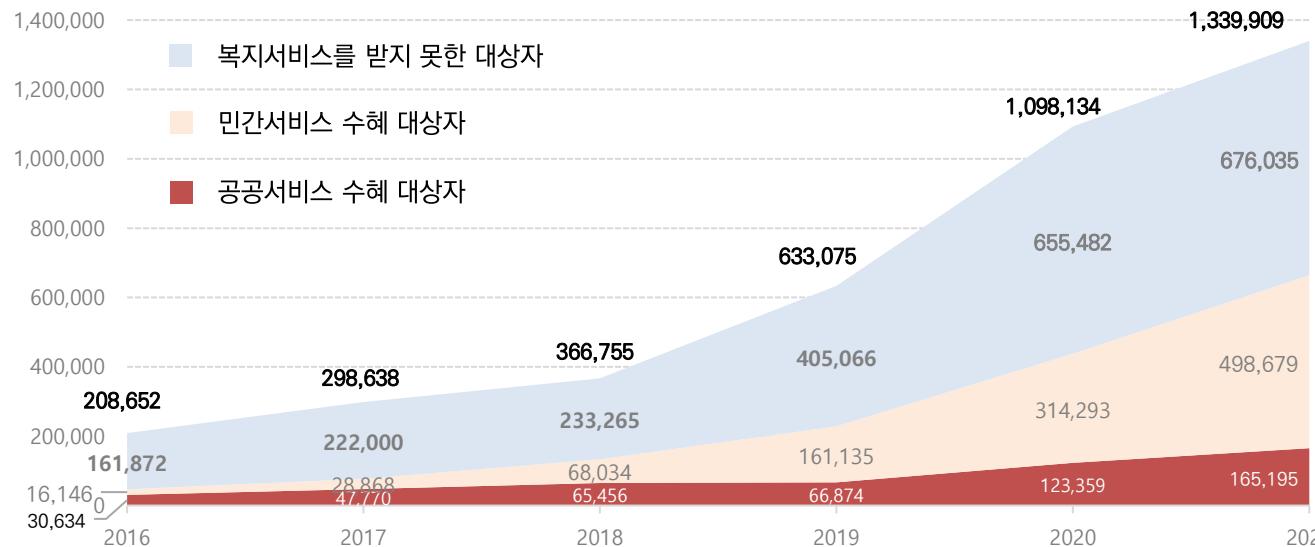
2.2.1 사회·경제환경 분석 > 2.2.1.5 사각지대 발굴 현황 분석

빅데이터 활용 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결 인원 중에서 민간서비스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비례하여 서비스를 지원 받지 못한 대상자도 큰 폭으로 증가함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이용 현황

(단위: 명)



-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정보 활용: '16년 13개 기관 23종 → '21년 18개 기관 34종으로 확대
- 지원대상자 중 공적서비스 수혜 대상자 비율: '16년 65.5% → '21년 24.9%로 비율 감소
- 발굴 대상자 중 지원 받지 못한 대상자: '16년 161,872명 → '21년 676,035명으로 확대

주요내용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공공서비스 보다는 민간서비스 비중이 확대되는 결과로 나타남
- '21년 발굴 대상자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된 수는 25,547명으로 4%에 불과함

시사점

-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의한 대상자는 확대되고 있으나, 대상자중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출처 : 연도별 빅데이터 활용 사각지대 발굴현황, 보건복지부

2.2 사회환경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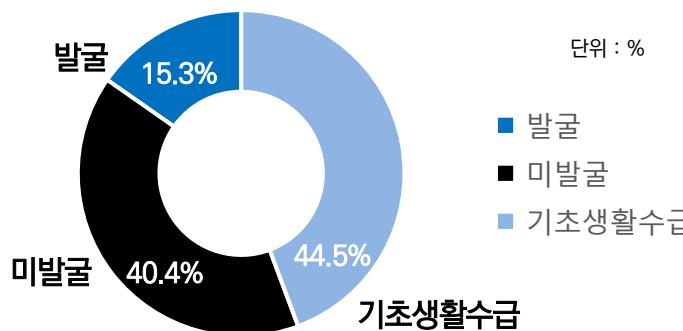
I. 환경분석

2.2.1 사회·경제환경 분석 > 2.2.1.5 사각지대 발굴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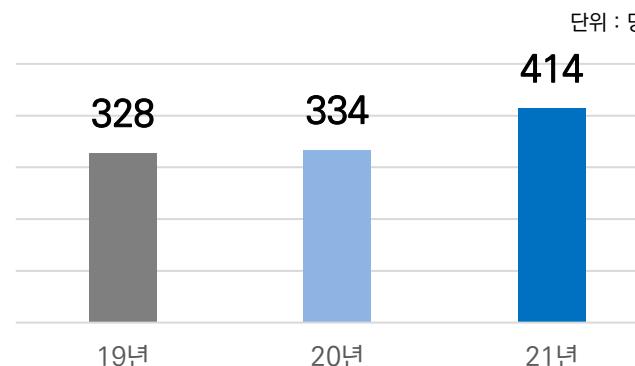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대상자 비중은 15.3%로 나타났으며, 기존 경제적 위기 중심의 포괄 사각지대 발굴체계에서 나아가 고독사 특성을 반영한 발굴체계 구축이 필요함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고독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발굴 현황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복지서비스 미이용자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대상자는 21년 기준 15.3%가 발굴되었으며, 40.4%는 발굴하지 못한 상태로 고독사가 발생하였음

주요내용

-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대상자의 비중은 15.3%인 것으로 조사
- 고독사 사망 전 복지 서비스 미이용자는 19년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시사점

- 기존 경제적 위기 중심의 포괄 사각지대 발굴체계에서 나아가 고독사 특성을 반영한 발굴체계 구축 필요

출처 :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통계 재가공), 보건복지부

2.2 사회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2.1 사회·경제환경 분석 > 2.2.1.5 사각지대 발굴 현황 분석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대상자가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신청절차 및 선정 과정이 복잡해서가 두번째 원인으로 나타남

복지사각지대 발생 원인 및 비신청 사유

주요내용

복지사각지대 발생 원인(복지제도 전반)

(단위: %)

구분	전체	시·군·구	읍·면·동	주거급여 사무소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대상자의 비신청)	45.7	42.0	46.5	50.5
관리·행정상의 문제	2.1	3.0	1.0	2.0
대상자 욕구에 의해 제공받는 서비스 or 급여수준이 낮아서	15.7	17.3	18.0	11.0
제한적 대상, 선별적 적용 범위 등 제도 설계 측면	36.4	37.7	34.5	36.5

대상자의 비신청 사유(복지제도 전반)

(단위: %)

구분	전체	시·군·구	읍·면·동	주거급여 사무소
대상자가 몰라서	70.9	70.6	64.5	77.2
신청절차 및 선정 과정이 복잡해서	13.1	12.7	17.2	17.2
자녀 등 가족 피해 우려	1.9	3.2	1.1	1.0
선정 기준이 엄격해서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아서	8.8	6.3	9.7	10.9
사회적 낙인 우려	3.1	4.8	3.2	1.0
제공받게 될 서비스 수준이 낮아서	0.9	1.6	1.1	0.0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없어서	1.3	0.8	3.2	0.0

- 복지 분야 사각지대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발생원인으로 대상자의 비신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비신청 사유는 대상자가 몰라서와 신청절차 및 선정과정이 복잡해서로 나타남

시사점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출처 : 복지분야 사각지대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인식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2 사회환경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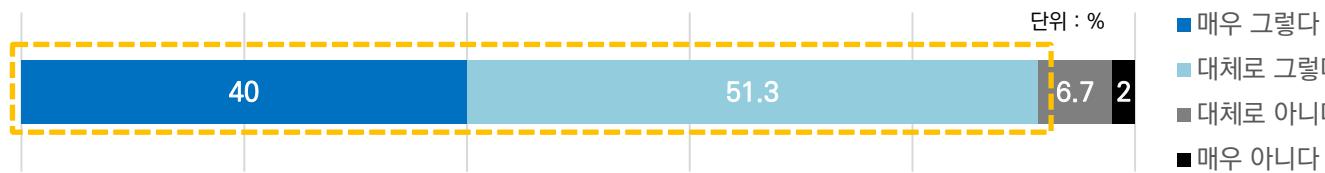
I. 환경분석

2.2.1 사회·경제환경 분석 > 2.2.1.5 사각지대 발굴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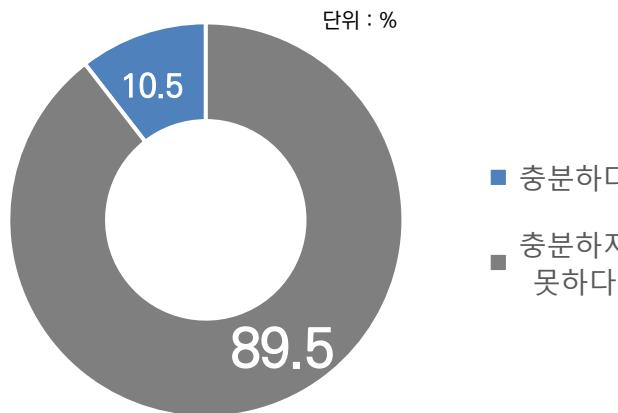
고독사 예방관리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예방 관리를 위해 고독사 발굴, 모니터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사됨

고독사 국민 인식 조사결과

고독사 예방에 있어 정부역할의 중요성



고독사 예방 정책의 충분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필요 정책	
공공 복지서비스 확대	31.3%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25.8%
주위사람들과 관계 형성	19.1%
고독사 예방교육 및 캠페인	9.5%
스마트 설비보급 확대	9.4%
...	...

출처 :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

주요내용

- 고독사 예방 대책이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89.5%로 집계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는 공공복지서비스 확대,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가 각각 31.3%, 25.8%로 집계됨

시사점

- 고독사 예방관리에 대한 정부 역할 중요 의견 증가
- 고독사 예방 관리를 위해 고독사 발굴, 모니터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사됨

2.3 정책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3.1 국가 정책환경 분석 > 2.1.1.1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하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함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1/4)

주요내용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운영원칙	국익, 실용, 공정, 상식
[국정 목표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국정 목표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 사회서비스 혁신 –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 100세 시대 일자리 건강돌봄체계 강화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 •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복지업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정책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사회 서비스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로 식별

2.3 정책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3.1 국가 정책환경 분석 > 2.1.1.1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하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함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2/4)

[국정 목표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제목표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구현

주요내용

-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여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적 과제 추진
 - 국민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 등과 연계한 공공서비스 개발 및 전달 등 민간의 혁신역량 적극 활용
- (일하는 방식 대전환) 인공지능·데이터를 기반으로 일 잘 하는 정부 구현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정밀 예측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 실현
 - 민원 구비서류 철폐 등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고,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강화 추진
-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공통 기반 마련
 -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 데이터 전면개방 및 마이데이터 전산업 확산
 - 한번의 인증, 한번의 정보 입력, 한번의 결제로 각종 공공서비스 처리 등 민·관 협업 기반 범정부 데이터·서비스의 개방·연계·활용 인프라 구축
 -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 운영
- (데이터 안전 활용 기반 강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

주요내용

-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여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정운영 과학화 실현 및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는 인공지능·데이터를 기반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구현 추진

시사점

-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국민체감도 높은 플랫폼 구축 추진
- 최신IT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업무 효율화 추진

2.3 정책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3.1 국가 정책환경 분석 > 2.1.1.1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하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함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3/4)

주요내용

[국정 목표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과제목표

- 사회적 논의를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으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중앙·지자체의 합리적 역할분담과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

주요내용

- (상생의 연금개혁)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 개혁 추진-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실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기반하여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 마련
 - '공적 연금 개혁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기반 마련
 - 상생의 연금개혁과 병행하여 현세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40만원)
-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기획·운영·평가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 중앙부처·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DB 구축을 통해 사회보장사업사전협의의 내실화 및 사후 평가 강화 등 체계적 관리 추진
 -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통계 체계 구축 등 객관적 분석에 기반한 사회보장 정책 수립 및 평가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개선 지원

- 중앙부처·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DB 구축을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내실화 및 사후 평가 강화 등 체계적 관리 추진

-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통계 체계 구축 등 객관적 분석에 기반한 사회보장 정책 수립 및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 지원

시사점

- 복지사업의 내실화 및 향후 정책 수립, 사후관리를 위한 복지사업 및 행정 데이터 통합, 통계 체계 구축 추진

2.3 정책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3.1 국가 정책환경 분석 > 2.1.1.1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하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함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4/4)

[국정 목표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과제목표

- 다양한 공급 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

주요내용

- (수요·공급 확대)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 –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 대상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 사회적 경제 조직 등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신뢰 향상 도모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 시스템 정교화 및 지자체 발굴 체계 강화
- (혁신기반 구축)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범부처-민관협업 체계 구축–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혁신 지원 강화
 - '민관합동 사회서비스 혁신TF'* 구성·운영을 통해 공급 기관 지원,
 - *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등 참여
- (처우 개선)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돌봄 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

주요내용

-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 – 청년, 맞벌이, 1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 시스템 정교화 지자체 발굴 체계 강화 추진

시사점

-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추진
- 복지서비스 혁신을 위한 민관협업체계 구축 틀 마련

2.3 정책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3.2 관련 정책환경 분석 > 2.3.2.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제 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약자복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사회보장의 목표를 가지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제 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 비전 · 목표

주요 내용

비전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목적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증진		
핵심 목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약자복지	누구나 누리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다음 세대와 상생하는 사회보장
전략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에 사회서비스 고도화
중점과제	1. 위기 직면한 사회적 약자 보호 2.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① 노약 빈곤완화 지원 ② 장애인 소득·돌봄 보장 강화 2.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발굴지원 ① 취약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 ②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새로운 복지수요 발굴·지원 ③ 소외된 약자 권리 보호·지원 강화 3.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대응 강화 ① 노동시장 지속 참여 촉진 ② 노후소득체계 내실화 ③ 복지 사각지대 발굴/신속 지원 강화	4. 수요맞춤형 사회서비스 실현 ①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충 ② 건강·의료보장 강화 ③ 안전한 일상 구현 및 교육·생활서비스 제공 5. 공급기반혁신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② 양질의 공급자 육성 기반 마련 ③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규제 합리화 6. 이용자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구축 ①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협력 활성화 ② 사회서비스 지역 격차·불균형 완화 ③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7.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개혁 ① 국민연금 제도 개혁 ② 고용보험의 합리적 운영 ③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체제 개혁 8.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①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체계 구축 ② 제도 전주기 관리 강화 ③ 중앙·지방 협력적 역할분담 9. 기술 기반서비스·행정체계 도입 ① 체감도 높은 스마트 서비스 개발 ② 스마트 서비스 활성화 인프라 구축 ③ 사회보장 행정체계 고도화

- 5년간 사회보장정책 비전·목표의 중점과제 중 본 사업과 관련 있는 과제는 2.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발굴 지원으로 식별됨

2.3 정책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3.2 관련 정책환경 분석 > 2.3.2.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제 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약자복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사회보장의 목표를 가지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제 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

주요내용

2.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새로운 복지수요 발굴 및 지원

정책목표

사회적 고립도(%) : 23.8('21) → 18.8('28)

고립 실태 파악

전국단위 표본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근거기반 정책 추진

*생애주기별 고독사 위험군 규모, 위기 요인, 복지 욕구 변화 등 고독사 위험군 특성 파악

고립 가구 발굴

생애주기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모형 개발

지자체 단위로 지역밀착형 고독사 위험군 발굴조사*실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사(연 6회), 주민등록 사실조사(연 1회 이상) 등 주민 대상 각종 조사와 연계

고립 해소 지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

*(23년) 시범사업, 39개 시군구 → (24년 7월부터) 전국 확대, 229개 시군구

- 전국단위 고독사 표본조사를 통해 근거 기반 정책 수립 추진
- 고립가구 발굴을 위한 발굴모형 개발 및 각종 조사와 연계, 지역밀착형 고독사 위험군 발굴조사 추진

시사점

-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추진
- 고립 실태 파악을 위한 표본조사를 통해 근거 기반 정책 추진

2.3 정책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3.2 관련 정책환경 분석 > 2.3.2.2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은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를 비전으로 국정과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총 4개 전략과 13개의 추진과제를 구성함

제 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주요 내용

비전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		
목표	고독사 발생 감소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 (21년) 1.06명→(27년) 0.85명	지역 주도형 고독사 대응체계 구축 고독사 대응체계 구축 고독사 예방·관리(시범)사업 추진 시군구 확대 (‘23년) 39개 → (‘27년) 229개	근거 기반의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 고독사 사망자·위험군 실태파악 강화 (기준) 5년 추가 → (개선) 1년 추가
전략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추진 과제	① 인적 안전망 등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②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한 고독사 위험군발굴 ③ 고독사 위험 정도 판단도구 개발	① 지역주민 간 연결을 촉진하는 지역공동체 공간 운영 ②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한 지지체계 구축 ③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연결 및 안부 확인	① 청년 위험군을 위한 정서 및 취업 지원 ② 중·장년 위험군의 일상생활 문제 관리·지원 ③ 노인 위험군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④ 사망자·유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

-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를 위한 국가지원 강화 및 국가적인 책임이 강조됨

2.3 정책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3.2 관련 정책환경 분석 > 2.3.2.2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는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 양성 및 고독사위험군 발굴에 필요한 행정정보 입수 확대등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제 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1/3)

과제 목표	인적 안전망 등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과제 목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취약가구 위주 발굴을 위해 운영 중인 인적 안전망 대상 고독사 예방 교육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기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좋은 이웃들(민간 자원봉사단) 등 ■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고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본인 또는 인적 안전망 등이 위기에 처한 이웃 발견 시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앱(APP)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전 국민 위기알림 신고시스템'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2.11.)'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협의 통해 구축 추진 ✓ 지역 내 1인 가구 대상 앱(App) 활용 안내를 통해 위험 정도 자가진단 및 필요 서비스 등을 사전 입력*하도록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력 결과를 지자체로 연계함으로써 지자체별 위험군 발굴조사·상담 등에 활용 ■ 시 군구별 고독사 위험군 발굴 조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독사 실태조사로 확인된 고독사 취약 지역·대상*은 시군구별 자체계획을 수립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조사 실시('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세대 주택 및 고시원 밀집 지역, 영구임대아파트 등 /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등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독사 위험군 발굴에 필요한 행정정보 입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위기정보 입수 확대 추진 ✓ 고독사 사례 분석(사회적 부검)을 통한 고독사 위기정보 지속 개발, 전문가 협의 및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입수 확대 ■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모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지역특성별 고독사 위험군 발굴모형 개발 ✓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인) 특성을 반영해 연령별 차별화된 고독사위험군 발굴모형 개발 ✓ 각 지역특성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두드러지는 위기정보 존재 여부 등을 분석해 지역별 차별화된 모형 개발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독사 위험군 및 조기발견을 위해 전국민 위기알림 신고시스템 구축 ■ 지역,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특화 모형 개발 추진 		

2.3 정책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3.2 관련 정책환경 분석 > 2.3.2.2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는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 양성 및 고독사위험군 발굴에 필요한 행정정보 입수 확대등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제 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

과제 목표	<h4>고독사 위험 정도 판단도구 개발</h4>	과제 목표	<h4>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연결 및 안부 확인</h4>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독사 위기 점검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에서 고독사 위험군의 위험 정도* 및 필요서비스 판단을 위한 점검표 개발('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 정도에 따라 고위험군은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로 연계해 집중 관리 ✓ 이미 자체적으로 고독사 위험군 판단기준을 운영 중인 지자체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전국 표준화된 점검표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 9개 질문(실패·상실감, 고립적 일상, 사회적 고립 등) 통해 위험군 판단 / 부산 : 12개 질문(사회적고립도, 가구취약성) 통해 위험군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력 결과를 지자체로 연계함으로써 지자체별 위험군 발굴조사·상담 등에 활용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인) 1인 가구 등이 스스로 적용해 볼수 있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기' 체크리스트* 개발('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로움 측정 중심인 문체부의 '사회적 연결성 척도('22년, 한국심리학회)' 연계·활용 ✓ 온·오프라인 체크리스트 개발·배포를 통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에 대한 경각심 강화 및 자발적인 행동 변화 유도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사회적 고립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이 고독사 위험군에게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함으로써 심리적 안정 등 지원(~'27년) ✓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복지도우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 등 대상 주기적인 복지욕구 확인 및 위기정후 감지 ■ 실시간 원격검침 및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안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독사 위험군의 전력·통신·수도 등 평소 사용패턴을 인공지능이 학습 후 사용량 급변 등 응급상황 감지 시 안부 확인(~'2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통신 :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한국전력공사·통신사) / 15개 시군구('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 : 위기 알림 서비스(한국수자원공사) / 19개 시군구('23년) ✓ 지자체 업무효율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 대화서비스 연계후 이상 징후 감지 시 지자체에서 안부 확인 추진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22년, 17.4만명 대상) 등 각종 스마트기기를 통한 고독사 위험군 응급상황 감지·대처 지속 추진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독사 위기점검표 및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한 고독사 위험 정도 판단도구 개발 ■ IoT기반 상황감지, 대화형 인공지능, 스마트기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속대처 지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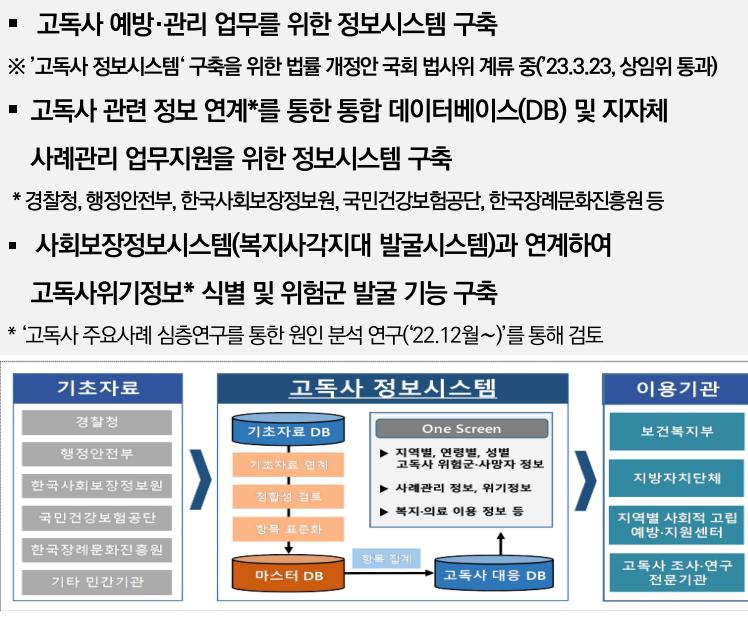
2.3 정책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3.2 관련 정책환경 분석 > 2.3.2.2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는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 양성 및 고독사위험군 발굴에 필요한 행정정보 입수 확대등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제 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3/3)

과제 목표	<h4>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h4>	과제 목표	<h4>주기적인 고독사 사망자 및 위험군 실태파악</h4>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고독사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23.3.23, 상임위 통과) ■ 고독사 관련 정보 연계*를 통한 통합 데이터베이스(DB) 및 지자체 사례관리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경찰청, 행정안전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문화진흥원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위기정보* 식별 및 위험군 발굴 기능 구축 고독사 주요사례 심층연구를 통한 원인 분석 연구('22.12월~')를 통해 검토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정보 입수)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정보 입수 근거 마련 ■ (정보 연계) 각 지역별 발생한 고독사 의심사건에 대해 '시·도 경찰청 및 시·도청 간' 정보연계* 근거 마련 * (예시) 시·도지사가 시·도 경찰청에게 정보 제공 요청 → 일정 주기별 관련 정보 회신 ✓ (전문기관 지정)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 주기적인 고독사 사망자 및 위험군 실태파악 ✓ 근거 기반의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하여 매년 고독사 사망자현황 실태 파악('24년~) ✓ 매년 전국단위 표본조사를 통해 생애주기별 고독사 위험군의 규모, 위기요인, 서비스 욕구 등을 정교하게 파악('24년~)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독사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적 근거 마련 ■ 고독사 사망자 및 위험군 실태파악을 통해 근거 기반 고독사 정책 추진 		

2.3 정책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3.2 관련 정책환경 분석 > 2.3.2.3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고립·은둔 청년지원방안에는 “청년의 건강한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전반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크게 발굴, 지원, 예방, 관리 절차에 따른 세부과제를 구성하고 있음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주요 내용

비전	청년의 건강한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전반 활력 제고				
방향	조기개입 및 예방정책 강화	취약청년 전담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23년 심층조사 결과) 1,903명 우선대상 지원 → 시범사업과 연계		효율적 자원관리, 제도화 등 기반조성	
주요 과제	상시 발굴	위기청년 조기 발굴체계 마련	온라인, 129콜 등 원스톱 접수	공식 요청자 1,903명 우선지원	자립준비청년 우선보호
	전담 지원 체계	고립·은둔 청[소]년 전담 지원체계 마련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센터	청년 청년 미래센터	청년 1인가구 등 일상돌봄, 공간조성
		초기 심리상담 → 일상생활·가족관계 회복 → 대인관계 경험 → 일 경험			
	예방	청년기 고립·은둔 일상 속 안전망 강화	학교, 학교 밖, 구직, 직장적용 등 학업·취업 위기 상황 예방		
	관리 제도화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 및 법적근거 마련	정보시스템 '희망e음' 활용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 마련	종사자·기관 역량 강화 제도화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조기개입 및 예방정책강화, 취약청년 전담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효율적 자원관리, 제도화 등 기반조성의 방향으로 주요과제 등을 수행하고 있음

2.3 정책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3.2 관련 정책환경 분석 > 2.3.2.3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발굴에서는 상시발굴로 온라인, 129콜 등 원스톱 도움창구가 신규로 개설되었고, 청년 전담체계에는 고립·은둔 청년팀이 사례관리, 공동생활으로 나누어서 전담함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1/2)

1. 발굴 고립·은둔 위기징후 조기 포착체계 마련

- (온라인 공공사이트 ‘자가진단’ 시스템 마련) ‘24년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취약청년 누구나 접근 가능한 온라인 창구 구축(‘25.~)
 - 북지부 소관 공공 사이트에 배너 연계 임시 구축(사회보장정보원) → ‘26년 이후 안착
- (자원봉사 모니터링단 운영) 우울증, 폐인 갤러리 등 고립·은둔 청년들이 주로 찾는 커뮤니티 대상 집중 발굴·홍보
 - 자살정보 게재와는 다른 특성(주로 속칭 ‘눈팅’). 도움요청 사이트 연계 링크 지속 게재 등 필요
- (‘24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과 연계) 실시지역으로 선정된 4개 시도 거주 청년은 전담인력을 통한 밀착 사례관리 추진(‘24.4월~)
 - ✓ 시범사업 미실시 지역은 표준사업 지침, 시범사업과의 프로그램 연계 방안 등 마련 후 지역별 온라인 지원방안 마련
- (소통 가이드라인 마련) 일상적 대화가 힘든 대상자 특성을 고려, 최초 접근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현장 가이드라인 제시(‘24.4월~)
 - 문자 안내(연락 취지, 전화(또는 방문) 상담일자 안내 등) 후 필요요구 파악 등
- (별도 전담인력 배치) 개인동의 전제로 정기적 자가진단, 심리지원, 자조모임 및 마음건강서비스 우선 이용 등 특화 사례관리

주요내용

2. 전담체계 ’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시범사업 실시

- (선도모델 개발) 지역 공모를 통해 4개 시도를 선정하여 지역별로 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센터별 고립·은둔은 8명, 총 32명 4개 시·도 배치)
- (표준 판단척도에 근거한 고립도 분류) 사회적 관계 측정 표준세트를 마련하여 과학적 근거 기반 대상자 유형 및 지원 프로그램 분류(‘24.4월~)
- (기존 서비스 연계) 일상돌봄 청년 1인가구까지 확대 등 연계 지원 강화
 - ✓ (사례관리 – 청년마음건강서비스 연계) 초기상담 시 유형 분류에 따라 마음건강서비스 바우처 이용지원
 - ✓ (청년 1인가구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을 주대상으로 하던 일상돌봄을 서비스가 필요한 1인가구 청년도 본인부담을 통해 이용 가능토록 제도개선 추진(‘24년~, 온라인 서비스 도입 검토)
- (전담지원체계 구축) 기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발굴부터 치유지원, 사후관리까지 한 곳에서 패키지 지원
- ✓ (사후관리) 청소년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지속 사례관리 및 19세 이후에는 성인기 지원체계로 연계

주요내용

시사점

- 고립 및 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동의 전제 특화 사례관리 추진
- 표준 판단척도에 근거한 고립도를 분류하여 위험군을 구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함

2.3 정책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3.2 관련 정책환경 분석 > 2.3.2.3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현재는 학생맞춤통합지원 기관·사업별 분절적 발굴·지원 시스템에서 향후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로 개편 될 예정임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2/2)

3. 예방. 학령기·구직기·직장초기 등 일상 속 안전망 강화

- (학교폭력 대응 강화)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립·은둔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피해학생 지원 강화
 - ✓ 자기존중감, 공감 등 학생의 사회성·정서적 역량신장을 지원하는 학폭 예방교육(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수정개발 및 활성화 추진
 -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온전한 치유·회복 및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전문의 심리치료 자문 등 전문지원 강화
- (위기학생 지원) 학교 부적응 등 위기 학생들이 고립·은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Wee프로젝트를 통한 심리·정서 지원 강화
- (정보연계) 위기시 초·중학생에 한정하여 학교-학교밖청소년센터 신속한 정보 연계 → 학업 중단 고등학생까지 확대
- ✓ 학업 중단 학생정보를 학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신속히 연계되도록 하여 대상자 고립·은둔 예방(법률개정 추진)
-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정서적 취약청년 대상 문화·인문자원을 활용한 문화케어 프로그램 운영, 정서고양 및 관계형성 지원('24년 9개소)

주요내용

4. 관리·제도화.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법적근거 마련

- (대상자 이력관리) 민간 사례관리사에 희망e음 사용권한 부여, 행정부담 완화 및 기록 전산화를 통한 사례관리 업무 고도화
 - * 사회서비스 공통업무안내 지침 개정 시 '24년 고립·은둔 청년지원 사업' 도 희망e음 이용가능한 사례관리 업무 종류로 포함(~'24.上) → 시스템 개선 필요사항 등 검토
- (복지사업 간 통합발굴 지원 및 서비스 연계) 희망e음 내 사례관리 플랫폼을 통해 타 사례관리 사업에서 대상자 발굴의뢰 접수
- (사례관리사 업무 매뉴얼) 유형분류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연계, 희망e음 등록·사용법 등 체계적 행동지침 마련('24.上)
- ✓ 시범사업 지역 미선정 지자체에도 매뉴얼을 배포하여, 지자체 자체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례관리 제공기관 기관역량 강화) 고립·은둔 청[소]년 관련 지원기관 대상 기관 간 정보·경험 공유 및 교류 확대 지원('25.~)
- ✓ 희망e음시스템을 활용, 공공 전담 지원기관 외 서비스 제공이력을 갖춘 민간기관에도 정보·경험공유 등 지원

주요내용

시사점

- 법률개정을 통해 신속한 위험군 발굴을 위해 고립은둔 위험 징후 정보 신속 연계 체계 추진
- 복지사업간 통합발굴 지원 및 서비스연계, 통합이력관리를 위한 차세대 사통망 기능개선 및 업무기능 고도화 추진

2.3 정책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3.2 관련 정책환경 분석 > 2.3.2.4 사회적 고립 관련 정책 동향

자살예방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사회적 고립 관련 정책 동향 분석 결과 고독사 대응 뿐 아니라 생전 사회적 고립, 고독을 예방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광범위한 연계 추진 필요

사회적 고립 관련 정책 동향

주요내용

국민취업지원기본계획 ('22~'26)

참여자 선제적 모집 및 발굴

복지멤버십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 소득 및 재산 요건별 잠재적 대상자 집중 발굴
국민비서 핫봇 서비스를 활용하여 제도 안내, AI를 활용하여 기초상담 및 신청까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과 청년 특화 지원

밀착, 종합적 지원이 필요한 지원강화형 수급자(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에 대해 사례관리(고용+복지문제 해결) 기능 강화

자살예방기본계획 ('23~'27)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멤버십 등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 초기상담 내용 바탕으로 욕구 위기도 조사를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 필요한 경우 연계 및 고위험군 발굴 강화

자살예방 정책 근거기반 마련

심리부검 참여 유족 범위 확대를 통한 폭넓은 정보 수집
심리부검 이후 원인분석을 통한 심층 연구 기반 마련
형사사법정보와 건보데이터 연계를 통해 전국 자살사망자 특성을 분석한 전국보고서 발간

건강가정기본계획 ('21~'25)

취약, 위기가족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저소득가구, 위기상황에 따른 나홀로 아동 등 지역사회 취약 가족 발굴 및 통합적 사례관리 추진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취약, 위기가족을 발굴하여 지자체에서 사례관리 중인 위기가구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원 서비스 연계 강화

인문정신문화진흥 기본계획 ('22~'26)

인문으로 외로움 / 사회적 고립감 극복 지원

연간 외로움 실태조사, 한국형 외로움 측정 척도 개발, 외로움 포럼 창립 및 지원
지역별 특성에 맞춘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관리 프로그램 개발 운영
기초/광역단위 외로움 상담 종합 지원 지역 거점 센터 지정
-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종합 지원

- 국민취업지원기본계획, 자살예방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여러 타 추진정책에서 복지전달체계와 연계한 정신건강 및 사회적 고립군의 위험군 발굴, 외로움의 측정 척도 개발, 맞춤형 사례관리, 타기관 정보 연계를 통한 특성 분석 통계 산출 등을 추진 중

시사점

- 고독사 대응 뿐 아니라 생전 사회적 고립, 고독을 예방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광범위한 연계 추진 필요

2.3 정책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3.2 관련 정책환경 분석 > 2.3.2.5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추진방향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팀 기능 확대, 주민력 강화,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통합돌봄· 사례관리를 통한 함께 살아가는 지역 만들기를 비전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방향」을 수립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추진방향

비전	통합돌봄·사례관리를 통한 함께 살아가는 지역 만들기	
목표	1.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능 확대 2. 시군구(읍면동) 연계협력 체계 확립	
전략	추진 과제	
①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 ▶ 읍면동 공공서비스 강화 ▶ 복지+건강 기능강화 	
②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지역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지역기반 구축 ▶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체계 활성화 ▶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수립 	
③ 주민력 강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실행 ▶ 지역 내 지식정보 공유체계 마련 ▶ 주민 중심의 지역네트워크(주민망) 구축 ▶ 주민생활 속 소통· 돌봄공간 확보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	복지	건강
	주거+일자리+교육+안전+a	

주요내용

- 접근성과 지역성을 고려한 읍면동 단위의 사업 추진
- 全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를 통해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기반 구축
- 주민 중심의 지역네트워크, 마을복지계획 수립, 소통/돌봄공간 확보를 통한 주민력 강화 지원

시사점

- 기존 복지행정(급여관리 및 행정처리)에서 벗어나 대상자 Outreach를 통해 어려운 환경을 직접 파악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

2.3 정책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3.3 국가정보화 정책환경 분석 > 2.1.3.6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정부는 “다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 세상 구현”을 위한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발표함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비전	다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 세상 구현
추진과제	중점 추진내용
“국민 누구나 종합적인 디지털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집 근처 디지털 교육 센터 전국 확대 ② 디지털 역량수준 척도 및 디지털 역량교육 통합 ③ 초/중/고등학생, 성인 대상 전 국민 SW·AI 교육 ④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 강화
“취약계층도 쉽게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농어촌 지역 등에 네트워크 인프라 확대 ⑥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기기 지원 ⑦ 웹, 모바일 앱, 키오스크 등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접근성 개선 ⑧ 저소득 학생 등 취약계층 원격교육 지원
“포용적 디지털 기술을 확산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⑨ 취약계층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⑩ IoT, AI를 활용한 취약계층 돌봄, 비대면 복지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⑪ 디지털 기반 포용기업 창업 지원/기술역량 강화 ⑫ 고령층, 장애인의 디지털 일자리 연계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국민 스스로 참여하는 디지털 사회활동 촉진”	
법사회적 디지털 포용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⑬ 시민사회/기업/단체가 참여하는 ‘디지털 포용연합’ 구성 ⑭ 시민 주도 디지털 사회활동을 위한 기반 제공 ⑮ ‘디지털 포용 법률’ 마련 등 법/제도 정비

주요내용

- 모바일 앱,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강화
- 비대면 복지서비스 구축 – 감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끊김 없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수급자 데이터/민간 온라인 서비스 연계 기반 조성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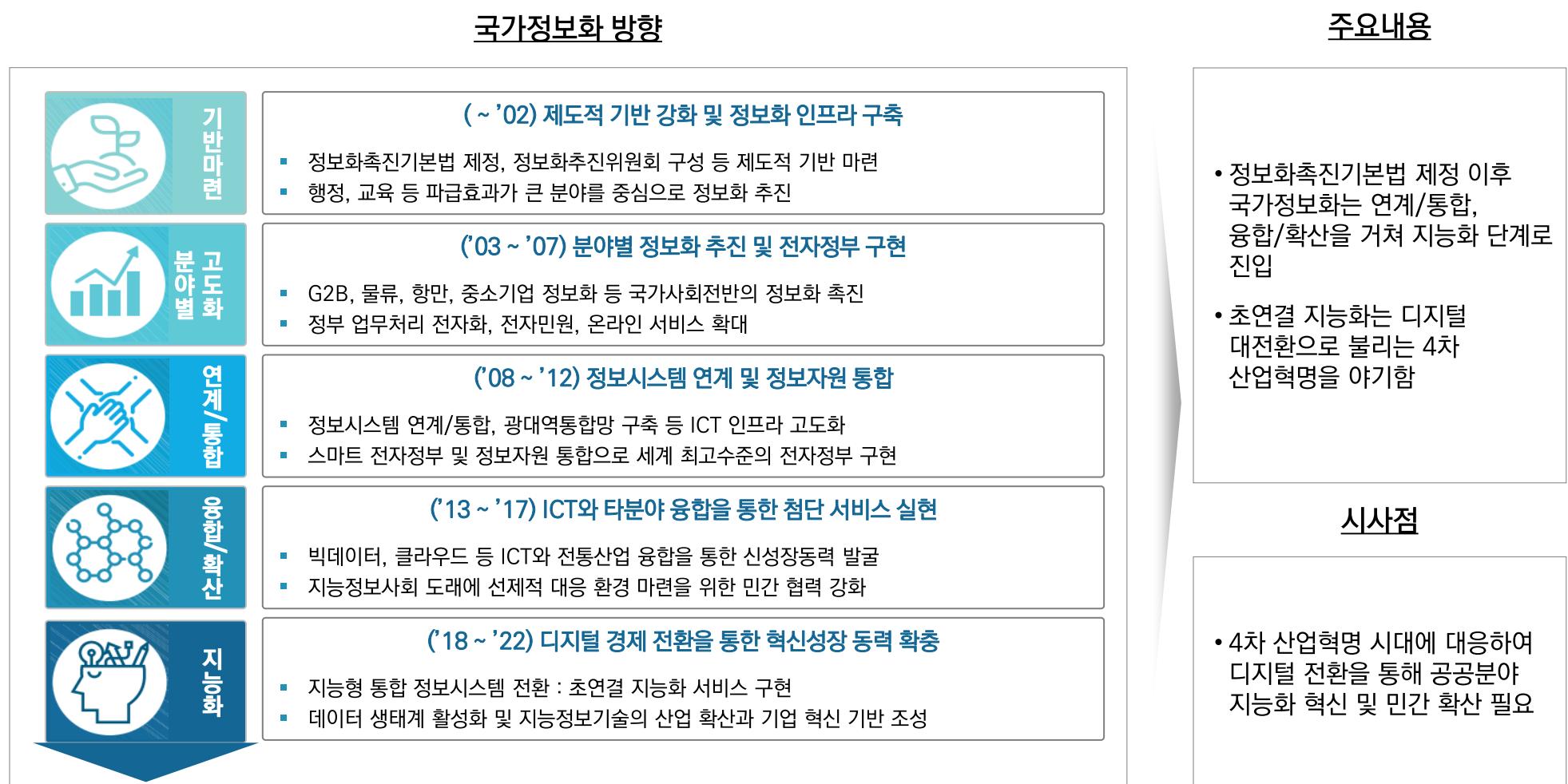
- 끊김없는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연계 기반 조성
- ICT 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고도화 및 비대면 서비스 제공방안 추진 필요

2.3 정책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1.4 국가 정보화정책 분석 > 2.1.4.1 국가정보화 방향

국가정보화 방향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을 통한 기반 마련 이후 고도화,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연계 및 통합, ICT와 전통산업의 융합/확산을 거쳐 초연결 지능화 단계에 진입



* 출처: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12

2.3 정책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1.4 국가 정보화정책 분석 > 2.1.4.2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방향

정부는 데이터/서비스 연계 및 통합을 통해 플랫폼에서 모든 데이터를 조회, 온라인 신청,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맞춤형/선제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방향

주요내용

비전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구현		
주요내용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이트 토탈서비스) 개별 사이트의 정보, 서비스를 연계 및 통합해, 국민은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든 서비스를 신청, 이용 ▪ (マイAI 서비스) 자격을 갖추고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수혜서비스를 신청하고, 신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제공 ▪ (Any-ID) 민간ID, 모바일 신분증 등 로그인 수단 중 하나로 간편 로그인 	
	과학적 국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플랫폼) 전 부처 데이터의 공유, 연계, 분석을 위한 공통기반을 마련하고, 개별기관은 통합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의사 결정 ▪ (온라인 종합상황실) 상황 지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간과 협업해 다부처 과제, 사회적 현안 등을 분석하여 국정방향 결정 지원 ▪ (스마트업무환경) 2PC를 1대 노트북으로 전환, 시공간 제약없이 업무처리 	
	혁신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공공서비스/데이터를民間에 대폭 개방 ▪ (기업) 융합/결합으로 다양한 혁신서비스 창출 ▪ (국민)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공공서비스 이용 ▪ [선도과제] 국민, 기업 체감성과를 조기 창출하도록 선도과제 집중관리 	

시사점

- 맞춤형 수혜서비스를 추천하고 선제적으로 제공
- 통합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학적 정책의사 결정

2.3 정책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1.4 국가 정보화정책 분석 > 2.1.4.2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방향

정부는 데이터/서비스 연계 및 통합을 통해 플랫폼에서 모든 데이터를 조회, 온라인 신청,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맞춤형/선제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방향

주요내용

국민체감 선도과제 추진방안

	As-Is	To-Be
실손보험 간편청구	국민이 팩스, 앱 등으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실손 증빙서류를 병원에서 종이로 발급 절차가 복잡하여 청구 포기 다수 발생	증빙서류를 병원에서 보험사로 디지털로 전송,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 불편 해소 실손 증빙서류를 병원에서 전자적으로 발급 민간 앱 등을 통해 청구 간소화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전국 청약정보를 청약홈/マイ홈/주거포털 등에서 각각 조회, 신청, 확인해야 하는 불편 청약자 개별 특성에 맞는 원스톱, 맞춤형 추천 부재	전국 청약정보를 민간 앱에서 한 번에 간편하게 조회, 신청, 확인 청약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원스톱/맞춤형 추천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부처, 자체,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 분산 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 선별의 어려움 지원사업 조회, 신청서류 준비 등의 번거로움	지원사업을 한 곳에 집적하여 민간플랫폼 연계 기업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선제적 맞춤형 추천 쉽고 빠른 원클릭 지원사업 신청
데이터 분석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회보장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급 기준이 복잡하여 조회, 신청이 어렵고 불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미인지, 거동불편 등으로 복지혜택 미수급 사례 발생	수급 희망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급 가능성 있는 사업을 선제적, 맞춤형 안내 복지 위기기구 등의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및 연계

- 국민체감 선도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서비스들의 주요 골자는 서비스 처리 절차의 간소화, 원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맞춤형/선제적 서비스 추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정책 진행으로 분석됨

시사점

- 맞춤형 수혜서비스를 추천하고 선제적으로 제공
- 통합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학적 정책의사 결정

2.3 정책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1.4 국가 정보화정책 분석 > 2.1.4.3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극대화하고, 지능화 혁신의 편익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국가정보화의 비전을 제시하는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함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18~'22)

주요내용

비전	지능화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능국가 ▪ 디지털 혁신을 통한 경제재도약 ▪ 함께하는 디지털 신뢰사회 ▪ 안전한 지능망 인프라 		
전략 및 과제	지능화로 국가 디지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지능화 기반 구축 ▪ 국민 체험기반의 행복서비스 제공 ▪ 지속 가능한 국가사회 안전체계확립 ▪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생활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를 통한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에 활용 필요 •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정부적인 선제적 대비 • 지속적인 정부 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혁신 추진
	디지털 혁신으로 성장동력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경제활성화 ▪ 지능화 기반 산업 혁신 ▪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 혁신성장을 위한 지능화 기술 경쟁력 제고 	시사점
	사람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정보社会의 디지털 시민 양성 ▪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실현 ▪ 지능정보사회문화 창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도입을 통해 국민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추진 • 공공부문 지능화 기반 구축을 통해 국가 디지털 전환 추진
	신뢰 중심의 지능화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정보기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망 구축 ▪ 사이버 안전 국가기반 확충 	

2.3 정책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1.4 국가 정보화정책 분석 > 2.1.4.4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정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의 촉진, 범정부 데이터 공동활용 기반 확충을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함

		<u>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u>	주요내용
비전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능형 정부서비스 구현		
추진 목표	정책결정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지능형 행정서비스 제공
추진 전략	추진 과제		
데이터 통합기반 구축으로 데이터 공동활용	1. 범정부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관리 2.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3. 분야별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연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1. 데이터기반행정의 제도적 기반 강화 2. 데이터기반행정 제도화 과제 발굴/추진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분석/지원	1. 국민체감형 분석과제 발굴 2. 범정부 정책과제 분석 및 분석품질 관리 3. 비정형 데이터 분석기반 조성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1. 데이터 관점의 행정 프로세스 혁신 2. 데이터기반 혁신역량 강화 3.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 문화 확산		

2.3 정책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1.4 국가 정보화정책 분석 > 2.1.4.4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정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의 촉진, 범정부 데이터 공동활용 기반 확충을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전략 3]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분석/지원

[3-1] 국민체감형 분석과제 발굴

- 국민체감, 현장중심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 복지/고용/안전 등 국민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중점 추진
 - 국민 안전,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체감형 분석과제 적극 발굴
 - 로그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감만족도 제고
 - 기관 운영 시스템 및 공공서비스에서 생산되는 로그데이터를 가공/분석하여 서비스 개선 등 국민 맞춤형 정밀 행정 추진
 -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공공서비스 제공
 - 복지사각지대, 중복수혜 예방을 지원하는 분석 모델 구축

[전략 4]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으로 혁신

[4-1] 데이터 관점 행정 프로세스 혁신

- 정책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 데이터 활용 촉진
 -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의 각 단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상황을 점검
 - (수립단계)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성과검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사전에 정의
 - (집행단계) 민원분석 및 소셜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유지/변경/개선 의사결정
 - (평가단계) 정책과제의 평가에서 성과지표를 보완하는 자료로 데이터 분석을 활용, 정책 결과 효과성 검증

주요내용

- 복지/고용/안전 등 국민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추진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분석 모델 개발 등 개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강조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 정책 수립, 집행 평가 활용

시사점

-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으로 공동활용 기반 마련 및 데이터기반행정 제도 확립을 통해 지능형 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기반 공공 업무 방식 혁신 추진

2.3 정책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1.4 국가 정보화정책 분석 > 2.1.4.5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을 가속화(공공서비스 디지털화 및 클라우드 전환)하고 정부 디지털 전환의 중장기 방향을 제기하기 위해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함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21~'25)

주요내용

비전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율 80% 달성 ■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율 100% 달성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서비스를 기획단계부터 디지털 기반으로 설계한다. ■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선택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 행정공공기관은 국민에게 단 한번만 정보를 요구한다. ■ 공공데이터와 서비스를民間에 개방하여 활용하게 한다. 		
전략 및 과제	지능형 서비스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 원하는 곳에서 공공서비스 이용 ■ 마이데이터와 전자증명서 활용 확대 ■ 모바일 신원증명과 간편인증 확산 ■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확산 	
	데이터 행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확산 ■ 현장데이터 기반으로 안전관리 강화 ■ 수요중심으로 공공데이터·서비스 개방 확대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확립 	시사점
	디지털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적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강화 ■ 디지털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 디지털 선도국에 걸맞는 국제협력 ■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선제/맞춤 서비스 추진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 클라우드 전환을 통한 전자정부 디지털 전환 추진

2.3 정책환경 분석

I. 환경분석

2.1.4 국가 정보화정책 분석 > 2.1.4.6 클라우드 정책 방향

정부는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클라우드 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주요내용

비전

클라우드 대전환을 통한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추진전략 및 과제

공공부문 민간클라우드
우선 이용

1. 민간 클라우드 이용 지원체계 마련
2.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도입 촉진
3.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조달체계 혁신
4. 안전한 민간 클라우드 이용환경 조성

민간 클라우드퍼스트 원칙

1.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정부 및 지자체 등이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허용된 영역에서 우수한 품질, 기술력,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이용하여 공공서비스 혁신 선도

2. 공공부문 전 영역 이용 허용

국가기밀, 안보, 범죄수사, 재판 등을 제외한 전 공공부문에 보안성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이용 허용

3. SaaS 우선 도입 & 클라우드 네이티브 설계

신규 서비스 구축 또는 기존 서비스 고도화시, SaaS 우선 도입 고려
적정 SaaS 부재시 PaaS 기반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구현 추진

4. 디지털 혁신 우선 클라우드 전환 추진

디지털 혁신을 우선하여, 기존 시스템(Legacy) 단순 전환이 아닌 신기술(AI, 데이터) 적용 및 첨단구조(멀티, 하이브리드) 기반 전환 추진

행정,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 추진(~25)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가 허용된 영역은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우선 검토하고, 그 외 시스템은 공공 클라우드 센터 배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행정/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등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현재 공공기관에 부과된 민간 클라우드 이용 노력의무를 국가기관 등(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 공공부문 전 영역 민간 클라우드 이용 허용
- 정보화사업 추진 시 민간 클라우드 전환 우선 검토 및 민간 클라우드 이용 노력 의무 대상 국가기관(중앙 행정,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사점

-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인식 제고

Table of Contents

I. 환경분석

1. 개요
2. 경영환경 분석
3. 법령 · 제도 분석
4. 정보기술동향 분석
5. 정보화 방향성 수립

- 3.1 분석 개요
- 3.2 추진 근거
- 3.3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업무 관점
- 3.4 시사점 종합

II. 중점분석

III. 목표모델 수립

IV. 이행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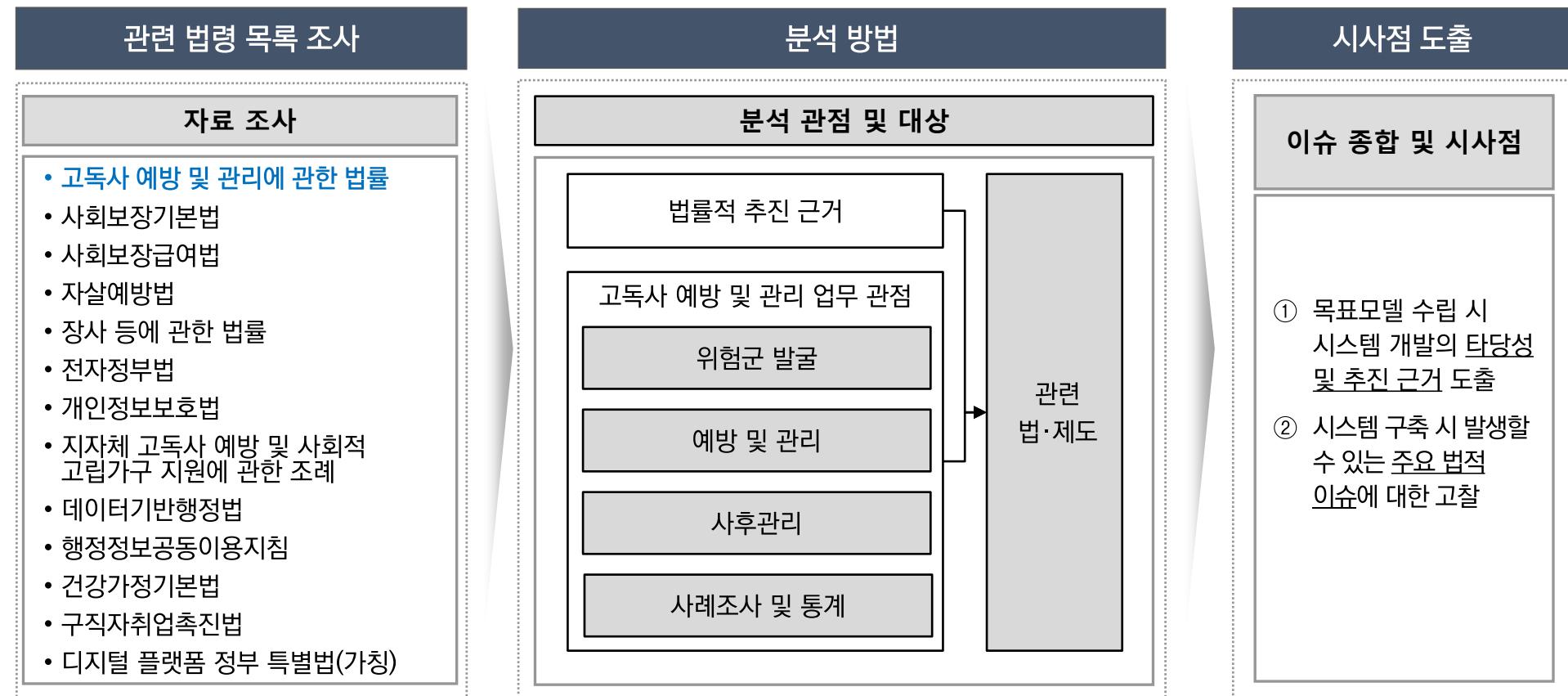
3.1 분석 개요

I. 환경분석

3.1.1 분석 Framework

법·제도 분석은 분석 목적 및 범위 명확화, 구체적인 분석대상 법·제도 목록 파악 및 분석대상 법령별 상세 내용 분석을 통해 향후 목표 모델 수립 시 추진근거 마련 및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방안을 도출함

법·제도 분석 Frame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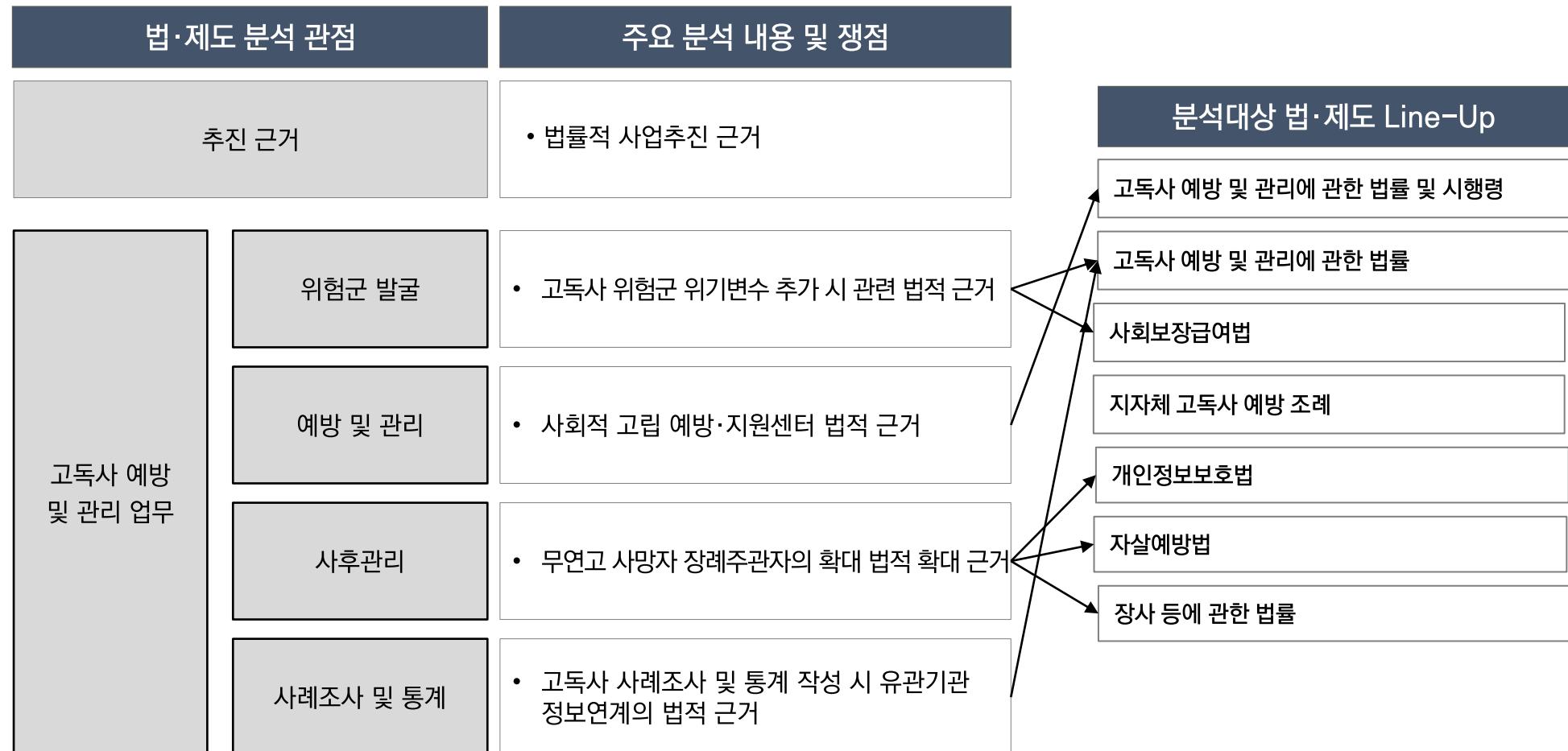
3.1 분석 개요

I. 환경분석

3.1.2 분석 목표

법·제도 분석은 분석 목적 및 범위 명확화, 구체적인 분석대상 법·제도 목록 파악 및 분석대상 법령별 상세 내용 분석을 통해 향후 목표 모델 수립 시 추진근거 마련 및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함

법·제도 분석 목표



3.2 추진 근거

I. 환경분석

3.2.1 법률적 사업추진 근거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 예방법) 및 시행령’의 개정안이 2024년 3월 15일 시행되어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추진 근거가 마련됨

추진경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7월~)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21.9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 (‘22.4월~) 기본계획 과제 발굴·협의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해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22.8월~) 지역주도형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 (‘22.12월) 공청회 통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결과 발표·의견수렴 (‘22.12월) 고독사 실태조사(‘17~‘21) 결과 발표 (‘22.12월) 고독사 예방 협의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구성 (‘23.5월)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통한 협의·조정(‘23.5.8.~‘23.5.10.) 및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 (‘23.5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 발표 	<p>제12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p> <p>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6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 운영)</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의 추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독사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23.8.24 국회 본회의 통과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2항』에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3.3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업무 관점

I. 환경분석

3.3.1 위험군 발굴_모델 개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모델에 필요한 위기변수로 판정 대상자들의 행정정보 및 생활정보 데이터를 용도 외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사회보장급여법 혹은 고독사 예방법을 활용할 것인지의 유권해석이 필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주요 쟁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독사 위험군 발굴에 필요한 행정정보 입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위기정보 입수 확대 추진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모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주기별 지역특성별 고독사 위험군 발굴모형 개발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특성 및 지역특성별 두드러지는 위기정보 존재여부 등을 분석해 차별화된 모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독사 위험군 위기변수 추가 시 사회보장급여법 12조 개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측모델이 강화되어 위기변수 추가 시 특별규정도 추가되어 개정되는 법률적 구조임 별도 모델적용 시에도 해당법만 개정되어도 되는지 해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 목적으로 인해 특정목적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법령 재정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경제위기 가구 추출 목적으로 44종의 위기변수를 활용 기관으로부터 개인 동의 없이 해당정보 입수를 위한 특별 규정을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종류별 정보성격을 일일이 규정
관련 법제도 검토		
<p>고독사 예방법 제 12조(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 · 운영 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p> <p>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정보</p>		

3.3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업무 관점

I. 환경분석

3.3.1 위험군 발굴_모델 개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공익성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타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연계·활용 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 법적근거

주요내용

비동의下의 개인정보활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에 의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사회보장급여법」의 특별 규정을 적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특별규정 내용

-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19. 12. 3., 2020. 4. 7.)*
1.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단전(전류제한을 포함한다), 「수도법」 제39조에 따른 단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단가스 가구정보(가구정보는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중 담당교원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학생의 가구정보
 3.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구의 가구정보
 5.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설의 장이 입소 탈락자나 퇴소자 중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대출금·신용카드대금·통신요금 등을 말한다)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7.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청탁한 임차인의 가구정보
 8.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
 9.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복지 사각지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수단으로 빅데이터 기반 발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
- 법적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에서 18개 기관으로부터 44종의 위기징후 정보를 입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측 모델이 강화되어 위기변수가 추가될 경우, 특별규정도 추가적으로 추가되는 법률적 구조임

3.3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업무 관점

I. 환경분석

3.3.1 위험군 발굴_기타 발굴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고독사 위험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델발굴 이 외 다각적인 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바, 인적안전망(게이트키퍼)의 역할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발굴의 효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주요 쟁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 안전망 등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의 사회적 고립가구가 조기 인지·발굴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우리마을 지침으로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이·통·반장, 지역 부녀회 등 경제적 취약가구 위주 발굴을 위해 운영 중인 인적 안전망 대상 고독사 예방 교육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기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안전망의 게이트 키퍼의 대상 신고의무 제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기 위해 게이트키퍼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을 통해 발굴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 목적으로 인해 특정목적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법령 재정 현재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의 경우,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의무 조항을 둠 최근 개정을 통해 전기수도 계량 및 겸침 관련 종사자도 포함하는 등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
관련 법제도 검토	<p>사회보장급여법 제 13조(시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의무)</p> <p>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9., 2016. 5. 29., 2018. 12. 11., 2019. 12. 3., 2021. 1. 12., 2023. 6. 13.></p>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굴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게이트키퍼의 신고의무 규정 마련 필요 	

3.3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업무 관점

I. 환경분석

3.3.1 위험군 발굴_기타 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의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신고 의무자의 대상을 확장시켜나가고 있으며, 해당 대상자의 직업군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의무 규정 내용

주요내용



신고의무 대상 지정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자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9., 2016. 5. 29., 2018. 12. 11., 2019. 12. 3., 2021. 1. 12., 2023. 6. 13.)*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3. 「의료법」 제2조 및 제3조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 ...
24. 「전기사업법」, 「수도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겸침 및 안전점검 관련 업무 종사자
25.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사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의 납부·징수나 연금·보험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한 민원 또는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의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최근 제 13조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대상자 업무군을 점차 확대하여 개정하고 있으며, 최근 23년도 24조와 25조가 추가되었음

개정사유	개정 전	개정 후
현행법상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을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진 기 / 수 도 / 가 스 겸 침 원, 국 민 연 금 공 단, 국 民 건 강 보 험 공 단, 근로복지공단의 상담원 등을 신고의무자에 포함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의무) • ② 각호(1-22) 기준 유지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의무) • (신설) 23. 자살예방센터의 장 과 그 종사자 • 24. 전기·수도 계량 및 겸침 관련 업무 종사자 • 25.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의 납부·징수나 연금·보험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한 민원 또는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자

3.3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업무 관점

I. 환경분석

3.3.2 예방 및 관리

고독사 예방법과 지자체 조례의 고독사 정의 불일치 사례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 예방 및 지원, 통계업무 혼선 발생 이슈 및 위험군 도출 대상 범위 축소 이슈

광역자치단체 고독사 예방 조례의 고독사 개념 분석결과

고독사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	고독한 죽음			외로운 삶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	동거 고독사	고독사 위험자	사회적 고립가구	1인 가구
서울시	●	●		●	●	
세종시	●			●		
부산시	●	●			●	●
대구시	●	●		●	●	
인천시	●			●		
광주시	●			●	●	
대전시	●			●	●	
울산시	●	●		●	●	●
경기도	●			●	●	
강원도	●	●		●	●	
충청남도	●			●	●	
충청북도	●			●	●	
전라북도	●		●	●		
전라남도	●			●		
경상남도	●			●	●	
경상북도	●			●	●	
제주도	●			●	●	●

주요내용

- 광역자치단체 고독사 예방 관리 조례 조사 결과 고독사 중 무연고 사망자를 정의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강원이며, 동거 고독사를 고독사에 정의한 지역은 전북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고립의 경우 부산, 울산, 제주도의 경우 1인가구를 사회적 고립에 포함되는 정의로 명시함

시사점

- 고독사 및 고독사 위험군을 규정하는 개념의 협소함으로 인해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효과성이 낮을 우려 존재

3.3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업무 관점

I. 환경분석

3.3.2 예방 및 관리

고독사 예방법과 지자체 조례의 고독사 정의 불일치 사례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 예방 및 지원, 통계업무 혼선 발생 이슈 및 위험군 도출 대상 범위 축소 이슈

광역자치단체 고독사 예방 조례의 고독사 예방 관리 서비스 선정 요건 조사 결과

구분	선정요건					비고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가구	재가복지 서비스 미지원 가구 중 고립위험취약자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서울시	●	●	●	●		
세종시						
부산시						
대구시	●	●	●	●		
인천시	●					
광주시	●	●	●	●		
대전시	●	●	●	●		
울산시	●	●	●	●	1인가구 한정	
경기도	●	●	●	●		
강원도	●	●	●	●		
충청남도	●	●	●	●		
충청북도						
전라북도	●					
전라남도	●	●	●	●	1인가구 한정	
경상남도	●	●	●	●		
경상북도	●	●	●	●		
제주도	●	●	●	●	1인가구 한정	

주요내용

-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 선정 요건 조사 결과 선정 요건이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있는 한편, 울산, 전남, 제주도의 경우 선정요건을 1인가구에 한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시사점

- 고독사 대상을 1인가구보다 광의적으로 재정의되면서 고독사 예방법과 지자체 조례의 내용이 상충되면서 발굴 오류 및 대상 범위축소 이슈 발생

3.3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업무 관점

I. 환경분석

3.3.2 예방 및 관리

고독사 예방법과 지자체 조례의 고독사 정의 불일치 사례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 예방 및 지원, 통계업무 혼선 발생 이슈 및 위험군 도출 대상 범위 축소 이슈

광역자치단체 고독사 예방 조례의 고독사 실태조사 항목 조사 결과

구분	실태조사 주기	실태조사 항목
서울시	시장이 정함	성별, 나이, 장애여부, 유형, 거주형태
세종시		시장이 정함
부산시	3년마다 조사 (필요시 시기 조정)	시장이 정함
대구시		시장이 정함
인천시		시장이 정함
광주시		시장이 정함
대전시	5년마다 조사	시장이 정함
울산시	1인가구 한정	시장이 정함
경기도		도지사가 정함
강원도		도지사가 정함
충청남도		실태조사 항목 부재
충청북도		도지사가 정함
전라북도	매년 실시	도지사가 정함
전라남도	5년마다 실시	도지사가 정함
경남(고립)		도지사가 정함
경상북도	5년마다 실시	도지사가 정함
제주도	실시 가능	도지사가 정함

서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5조(실태조사)

1.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음
3.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나이, 장애여부, 유형, 거주형태를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함

울산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5조(실태조사)

1. 시장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주요내용

- 고독사 및 위험군 실태조사의 경우 서울시만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을 명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태조사의 조사간격은 1년, 3년, 5년, 시장이 정함 등 일률화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시사점

- 광역자치단체마다 실태조사 (통계 포함) 항목 및 조사간격이 상이하여 통계 업무 및 중앙 집계 과정에서 업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3.3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업무 관점

I. 환경분석

3.3.3 예방 및 관리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중앙 및 지역에 지정·운영하여 고위험군 지원 및 실태조사를 위한 실행기관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므로 센터에 대한 명시적 규정 마련이 필요함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
 - (중앙)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지원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는 중앙 단위 전문기관 지정
 - (지역) 시군구 및 읍면동과 협력해 지역 내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지역센터 지정
- * 지역 내에서 유사업무 수행 중인 기존센터*를 최대한 활용·지정

주요 쟁점

- 고독사 예방 관련 정책의 실행과 향후 고독사 정보시스템 구축 후 고위험군 지원 및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에 대한 명시적 역할 규정 검토

주요내용

-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의 역할 규정 부재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중앙 및 지역에 신규 지정·운영하여 정부의 고독사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향후 고독사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를 바탕으로 고위험군을 찾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매년 진행하는 고위험군 실태조사를 센터가 맡게 될 예정임

관련 법제도 검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사점

-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합법적 역할 규정 마련 필요

3.3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업무 관점

I. 환경분석

3.3.4 사후관리

2023년 3월 28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의 신설로 인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와 장례주관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마련됨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확대**
 -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도 제대로 된 공영장례*가 이뤄지도록 공영장례 표준모델 정립 및 장례지원 지속 확대
 - * 인수자가 없는 시신 매장·화장 이전에 지자체가 빈소마련 등 장례의식 추진 /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현재 101개 지자체가 공영장례 지원 중
-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고체계 구축**
 - 혈연 중심 장례문화 탈피 및 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통해 장례주관자 범위 확대* 추진('23년)

주요 쟁점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경제적 능력 부족,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유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례 증가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장례주관자 범위 확대에 따른 법적 근거 검토

주요내용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주관자 범위 확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법적 장례주관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해 공영장례가 지자체별로 지속 확대되는 추세임

관련 법제도 검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시사점

-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 통해 장례 주관자 범위 확대로 무연고 사망자가 지정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3.3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업무 관점

I. 환경분석

3.3.4 사후관리

2023년 3월 28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의 신설로 인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와 장례주관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마련됨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 지정제도 개정의 의미

개정 사유 및 필요성

-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개정의 의미

- 장사법 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일에 일보 전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무연고 사망자’ 시신을 반드시 ‘장례의식’을 행한 후에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해야만 하며, 가장 의미 있는 바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 등과 같이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도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는 점

3.3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업무 관점

I. 환경분석

3.3.4 사후관리

고독사 위험군 발굴 위기정보 입수를 위한 급박한 상황 및 유족 사후관리(사회적 부검)에 대한 개인정보 특례조항 필요함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위기 정보 입수 마련
 - 고독사 사례 분석((가칭)사회적 부검) 등 개정 등을 거쳐 입수 확대

주요 쟁점

- 고독사 사례 분석(사회적 부검)을 통해 확대 요구되는 위기 정보 입수 마련

관련 법·제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2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

⑤ 고독사위기대응 시스템의 구축 · 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살예방법 제11조의2(심리부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실행위 전후의 심리 · 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요내용

- 공익 목적의 급박한 상황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특례조항 부재
 - 사회적 부검 목적의 고독사 유가족·관계자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특례조항 없음

시사점

- 고독사 사례 분석(사회적 부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족 등 지인 개인정보 확보 등에 관한 법령 개정 필요

3.3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업무 관점

I. 환경분석

3.3.5 사례조사 및 통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의거 고독사 주요 통계작성 목적의 주요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함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 법적근거 마련 통해 시·도지사와 시·도 경찰청장간 고독사 의심사건 정보공유
 - 시·도지사가 시·도 경찰청장에게 정보 제공 요청 → 일정 주기별 관련 정보 회신을 통한 대상 범위 확정
- 고독사 관련 정보 연계를 통한 정보시스템 구축
 - 경찰청, 행정안전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례문화 진흥원 등
- 포괄적 정책 연계
 - 지역사회보장계획('23~'26),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건강가정기본 계획('21~'25), 국민취업지원기본계획('22~'26),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2~'26) 등

주요 쟁점

- 현재 고독사 사망자 주요 통계는 경찰청 변사자 현장 감식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DB, 사회보장정보원 DB와 고독사 사망자 연계를 통해 주요 통계를 산출함.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지자체 사례조사 등과 같이 추가적인 대조업무를 통한 정확한 통계 산출이 필요함

주요내용

- 통계작성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연계 근거 부재
 - 통계작성을 위한 정보연계는 현재 경찰청 형사사법정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제공외에 추가될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연계 근거 부재

관련 법·제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1조(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 ① 제 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시사점

- 고독사 통계작성을 위한 유관기관 유기적 협조시스템 구축필요에 따른 법률 개정 필요

2.5 외부환경 분석 종합

I. 환경분석

2.5.1 시사점 종합

외부환경 분석을 통해 파악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외부환경

	<u>주요내용</u>	<u>시사점</u>
경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 : 15년 27.2% → 21년 33.4%로 지속적으로 증가 ■ 연령대별 1인가구 비중은 30대 이하가 19.8%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40대 이후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가구 비중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COVID-19 이후 급격한 경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으로 인플레이션이 급증함 ■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파고를 넘기 위하여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이어감 ■ 지니계수 추이는 2017년 0.406에서 2021년 0.405으로 비슷한 양상을 띤다 ■ 상대적 빈곤율 추이는 2017년 19.7%에서 2021년 20.8%로 증가 ■ 지니계수 추이,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상대적 빈곤율 추이 등 3대 소득분배지표 분석 결과 소득 양극화 심화 ■ OECD 2020 삶의 질 지표 분석 결과 장기실업률, 기대수명, 교육역량 분야등의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삶의 만족도, 지원네트워크의 품질, 근로시간 과다등의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타남 	<p>전체 가구 중 1인가구 차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1인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p> <p>시장경제 안정을 위한 긴축재정 기조로 인하여 복지, 민생 안정정책의 축소 예상</p> <p>공공복지지원을 통해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분배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시장소득 기준 소득분배지표는 악화</p> <p>삶의 만족도, 지역 커뮤니티 등 지역사회 부문의 삶의 질 지표가 타국과 대비 낮음</p>
사회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만족도분야 지표는 5.9%로 OECD 평균 6.5%보다 낮게 집계됐으며 40개국 중 33위를 기록 ■ 지역 커뮤니티 분야 지표는 78.4%로 OECD 평균 89%보다 낮게 집계됐으며 40개국 중 40위를 기록 	

2.5 외부환경 분석 종합

I. 환경분석

2.5.1 시사점 종합

외부환경 분석을 통해 파악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외부환경

주요내용

- 정서적, 돌봄적, 경제적 관계망 세 지표 모두 2017년 대비 2023년 점차적으로 도움받을 사람의 비율 및 인원 수가 감소하는 추세
- 사회적 관계망 조사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 지표에 대해 도움 받을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임
- 농어업 및 기능노무직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문관리, 사무직에 종사 인구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경향을 띠며,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임
-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별거/이혼/사별 40.0%, 미혼(연인 있음) 36.8%, 미혼(연인 없음) 36.5%, 결혼 22.0%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함
- 연령이 높아질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추세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임

고독사 실태 현황

-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증가 추세에 있음
- 고독사 사망자 수는 매년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가량 많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10.0%, 여성이 5.6%로 차이를 보임
- 고독사 실태 현황 조사 결과 50대~60대의 비율이 전체의 62.4%로 과반수를 차지함
- 발생장소는 주택(50.3%), 아파트(22.3%), 원룸(13.0%) 순으로 조사됨

시사점

돌봄, 경제, 정서적 관계망 모든 지표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사회적 관계를 맺을 사람 인원 수도 감소 추세

성별, 연령, 직업, 소득, 학력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 지표에 차이를 보임

연령대가 낮은 집단에서 주관적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별거/이혼/사별 경험이 있는 경우 외로움 비율이 높음

인구구조 및 사회적 관계망 약화에 따른 고독사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고독사 사망자는 노년층에 비해 중장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취약한 것으로 조사됨

이동성이 낮은 주거형태와 고독사 발생 현황 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

2.5 외부환경 분석 종합

I. 환경분석

2.5.1 시사점 종합

외부환경 분석을 통해 파악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요내용	시사점
외부환경	고독사 위험군 실태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독사 위험군은 50대 33.9%, 60대 30.2%, 40대 25.8%로 주로 중장년층이 주요 위험군으로 조사됨 ■ 연령별 고독사 위험군 체감 힘듦요소 및 필요 욕구는 차이를 보이며, 중장년의 경우 경제적 문제가 주요 힘듦요소로 조사됨 	<p>고독사 위험군은 노년보다 40~60대 중장년층이 주요 위험군으로 조사, 연령에 따라 필요 욕구는 차이를 보임</p>
	사각지대 발굴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공공서비스 보다는 민간서비스 비중이 확대되는 결과로 나타남 ■ '21년 발굴 대상자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된 수는 25,547명으로 4%에 불과함 ■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대상자의 비중은 15.3%인 것으로 조사 ■ 고독사 사망 전 복지 서비스 미이용자는 19년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복지 분야 사각지대 발생원인으로 대상자의 비신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비신청 사유는 대상자의 비인지와 신청절차 및 선정과정이 복잡해서로 나타남 	<p>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의한 대상자는 확대되고 있으나,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p> <p>기존 경제적 위기 중심의 포괄 사각지대 발굴체계에서 나아가 고독사 특성을 반영한 발굴체계 구축 필요</p>
	국민인식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독사 예방 대책이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89.5%로 집계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는 공공복지서비스 확대,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가 각각 31.3%, 25.8%로 집계됨 	<p>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p> <p>고독사 예방관리에 대한 정부 역할 중요 의견 증가</p> <p>고독사 예방 관리를 위해 고독사 발굴, 모니터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사됨</p>

2.5 외부환경 분석 종합

I. 환경분석

2.5.1 시사점 종합

외부환경 분석을 통해 파악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외부환경

정책 현황

주요내용

-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복지업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정책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사회 서비스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로 식별
-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여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정운영 과학화 실현 및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는 인공지능·데이터를 기반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구현 추진
- 중앙부처·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DB 구축을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내실화 및 사후 평가 강화 등 체계적 관리 추진
-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통계 체계 구축 등 객관적 분석에 기반한 사회보장 정책 수립 및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 지원
-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 – 청년, 맞벌이, 1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 시스템 정교화 지자체 발굴 체계 강화 추진
- 고독사 위험군 및 위험 정도 판단,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를 위한 국가지원 강화 및 국가적인 책임이 강조됨
- 고독사 위험정도 판단도구 개발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연결 및 안부확인을 위한 고독사 위기 점검표 개발 및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해 사회적 고립완화 등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시사점

-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국민체감도 높은 플랫폼 구축 추진
- 최신IT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업무 효율화 추진
- 복지사업의 내실화 및 향후 정책 수립, 사후관리를 위한 복지사업 및 행정 데이터 통합, 통계 체계 구축 추진
- 복지서비스 혁신을 위한 민관협업체계 구축 틀 마련
- 고독사 위험군 및 조기발견을 위해 전국민 위기알림 신고시스템 구축
- 지역,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특화 모형 개발 추진
- 고독사 위기점검표/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한 고독사 위험 정도 판단도구 개발

2.5 외부환경 분석 종합

I. 환경분석

2.5.1 시사점 종합

외부환경 분석을 통해 파악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요내용

-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는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 양성 및 고독사위험군 발굴에 필요한 행정정보 입수 확대등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접근성과 지역성을 고려한 읍면동 단위의 사업 추진
- 全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를 통해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기반 구축
- 주민 중심의 지역네트워크, 마을복지계획 수립, 소통/돌봄공간 확보를 통한 주민력 강화 지원
- 모바일 앱,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강화
- 비대면 복지서비스 구축 – 감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끊김 없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수급자 데이터/민간 온라인 서비스 연계 기반 조성
- 국민취업지원기본계획, 자살예방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여러 타 추진정책에서 복지전달체계와 연계한 정신건강 및 사회적 고립군의 위험군 발굴, 외로움의 측정 척도 개발, 맞춤형 사례관리, 타기관 정보 연계를 통한 특성 분석 통계 산출 등을 추진 중

시사점

- 고립 및 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동의 전제 특화 사례관리 추진
- 표준 판단척도에 근거한 고립도를 분류하여 위험군을 구분, 맞춤형 지원을 추진
- 법률개정을 통해 신속한 위험군 발굴을 위해 고립은둔 위험 징후 정보 신속 연계 체계 추진
- 복지사업간 통합발굴 지원 및 서비스연계, 통합이력관리를 위한 차세대 사통망 기능 개선 및 업무기능 고도화 추진
- 기존 복지행정(급여관리 및 행정처리)에서 벗어나 대상자 Outreach를 통해 어려운 환경을 직접 파악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
- 끊김없는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연계 기반 조성
- 고독사 대응 뿐 아니라 생전 사회적 고립, 고독을 예방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광범위한 연계 추진 필요

2.5 외부환경 분석 종합

I. 환경분석

2.5.1 시사점 종합

외부환경 분석을 통해 파악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외부환경

정책 현황

주요내용

- 94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정보화는 연계/통합, 융합/확산을 거쳐 지능화 단계로 진입
- 초연결 지능화는 디지털 대전환으로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을 야기함
- 데이터/서비스 연계 및 통합을 통해 플랫폼에서 모든 데이터를 조회, 온라인 신청,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맞춤형/선제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 국민체감 선도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서비스들의 주요 골자는 서비스 처리 절차의 간소화, 원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맞춤형/선제적 서비스 추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정책 진행으로 분석됨
-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범정부적인 선제적 대비
- 지속적인 정부 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혁신 추진
- 복지/고용/안전 등 국민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추진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분석 모델 개발 등 개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강조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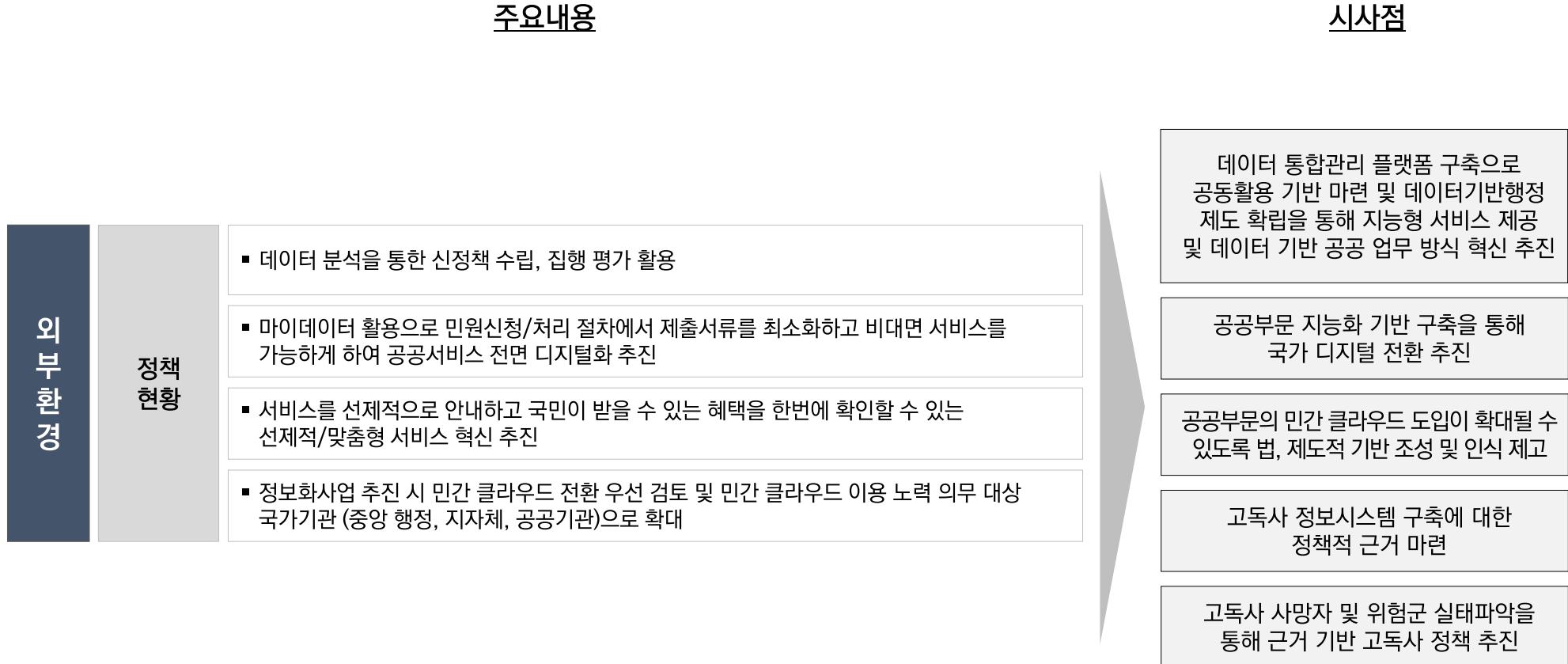
- 고립 실태 파악을 위한 표본조사를 통해 근거 기반 정책 추진
-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추진
- ICT 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고도화 및 비대면 서비스 제공방안 추진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공공분야 지능화 혁신 및 민간 확산 필요
- 맞춤형 수혜서비스를 추천하고 선제적으로 제공
- 통합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학적 정책의 사 결정
- AI 도입을 통해 국민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추진

2.5 외부환경 분석 종합

I. 환경분석

2.5.1 시사점 종합

외부환경 분석을 통해 파악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3.4 시사점 종합

I. 환경분석

3.4.1 시사점 종합

법·제도 분석을 통해 파악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요내용	시사점
법 제 도 분 석	추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 예방법) 및 시행령'의 개정안이 2024년 3월 15일 시행되어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추진 근거가 마련됨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에 대한 법적 타당성 확보
	위험군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경제위기 가구 추출 목적으로 44종의 위기변수를 활용 기관으로부터 개인 동의 없이 해당정보 입수를 위한 특별 규정을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종류별 정보성격을 일일이 규정 예측 모델이 강화되어 위기변수가 추가될 경우, 특별규정도 추가적으로 추가되는 법률적 구조임 현재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의 경우, 지원대상자 별견 시 신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의무 조항을 둠 최근 개정을 통해 전기수도 계량 및 검침 관련 종사자도 포함하는 등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 	고독사 위험군 발굴목적의 위기정보 입수를 위해 원천기관으로부터 목적외 용도로 제3자 (보건복지부) 제공 필요한 경우 특별규정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 마련 필요
	예방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독사 예방법과 지자체 조례의 고독사 정의 불일치 사례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 예방 및 지원, 통계업무 혼선 발생 이슈 및 위험군 도출 대상 범위 축소 이슈 	발굴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게이트키퍼의 신고의무자 규정 마련 필요

3.4 시사점 종합

I. 환경분석

3.4.1 시사점 종합

법·제도 분석을 통해 파악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법 · 제 도 분 석
예방 및 관리
사후관리
사례조사 및 통계

주요내용

- 공익 목적의 급박한 상황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특례조항 부재 : 사회적 부검 목적의 고독사 유가족·관계자 정보 수집 및 사회적 부검 목적 활용에 대한 특례조항 없음
-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의 역할 규정 부재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중앙 및 지역에 신규 지정·운영하여 정부의 고독사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향후 고독사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를 바탕으로 고위험군을 찾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매년 진행하는 고위험군 실태조사를 센터가 맡게 될 예정임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주관자 범위 확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법적 장례주관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해 공영장례가 지자체별로 지속 확대되는 추세임
- 통계작성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연계 근거 부재
 - 통계작성을 위한 정보연계는 현재 경찰청 형사사법정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제공외에 추가될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연계 근거 부재

시사점

- 고독사 사례 분석(사회적 부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족 등 지인 개인정보 확보 등에 관한 법령 개정 필요
-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합법적 역할 규정 마련 필요
-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례주관자 범위 확대로 무연고 사망자가 지정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규정 확보
- 고독사 통계작성을 위한 유관기관 유기적 협조시스템 구축 필요에 따른 법률 개정 필요